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전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the Constructio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to Daejeon Metropolitan ; Focused  
on Migration

임 병 호

연구진

연구책임

• 임병호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행정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검토.....  
제1절 추진배경 및 관련법.....  
제2절 관련계획 검토.....

제3장 행정도시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2절 충남과 충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3절 선행연구 종합.....

제4장 대규모 신도시개발과 인접도시와의 인구이동에 관한 사례연구..  
제1절 수도권 사례.....  
제2절 비수도권 사례.....  
제3절 소결.....

제5장 행정도시 건설과 대전시민 인구이동 예측.....  
제1절 대전시민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제2절 행정도시 첫마을 건설 및 분양현황 검토.....  
제3절 소결.....

제6장 행정도시 건설과 대전시의 대응방안.....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대전시의 대응방안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 표 목 차 -

- 그림 목차 -

---

## 제 1 장

---

###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간지뒀면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의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도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행정도시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은 일단락되고, 지지부진하던 도시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몇 자로 압축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도시는 2030년 최종적인 목표인구규모를 50만으로 설정하고, 2011년 현재 시점으로 볼 때 향후 20년 동안 도시건설이 진행되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많은 신도시 건설에 비해 차별화된 완결적인 신도시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도시 건설은 건설이전부터 인접지역에 많은 유무형적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건설이 본격화되고 완료될 경우 이전에 비해 인접지역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접지역으로서 청주시나 공주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인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하므로, 대전시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전시 차원에서 몇몇 연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는 선언적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행정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도시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 주거환경 특히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향후 대전시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의 자문 등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조사 방식으로는 행정중심복합 개발계획 등 관련계획 그리고 행정도시와 관련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으며,

사례조사는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선행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대규모 신도시건설이 인접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가동 측면에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행정도시 건설 이후, 대전시에서 행정도시로의 인구가동을 예상코자,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이동의 의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과 골격, 조사내용 등에 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예상목차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명료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방법론과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제2장 행정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을 검토하였다. 행정도시 추진현황은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공포 이후 주요 내용을 시기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관련계획 및 법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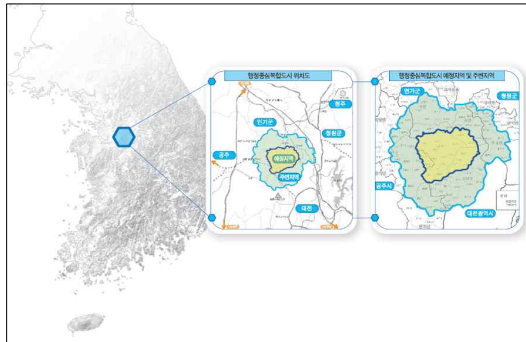
제3장에서는 행정도시 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행정도시가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대규모 신도시개발 시 인접도시와의 인구이동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는 수도권 내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인접한 도시에서 신도시로의 인구이동, 그리고 외부지역(전국)으로부터 인접도시로의 인구이동 등을 살펴보았다. 수도권 내 신도시 사례는 분당, 일산이며, 수도권 외 신도시 사례는 창원과 남약이다.

제5장에서는 행정도시가 건설될 경우, 대전시로부터 행정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예측,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2가지 내용을 다루었는데, 첫 번째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두 번째로는 최근 진행된 행정도시 첫마을 분양 및 계약현황이다. 이와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대전시에서 행정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제6장은 결론적인 내용으로 앞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대전시의 인구이동 등에 대해 대전시가 수행해야할 과제 및 대응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그림 1-1] 행정도시 위치도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원고뒷면

---

## 제 2 장

---

### 행정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검토

---

제1절 추진배경 및 관련법

제2절 관련계획 검토

---

간지뒀면

## 제2장 행정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검토

### 제1절 추진 배경 및 관련법

#### 1. 행정도시 건설의 배경 및 정책목표

##### 1) 건설의 배경

우리나라의 인구나 경제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행정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 2)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행복도시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품격 높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따라, 복합형 행정·자족도시, 살기 좋은 인간중심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품격 높은 문화·정보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 3)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 조화로운 민주도시

- 도시기능을 분산배치한 민주적 도시공간 구조를 조성
-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
-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
- 누구에게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다양한 문화 및 복지기반을 조성

#### □ 시민중심의 열린 도시

-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을 배치
-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도시행정기관을 개방적으로 배치

#### □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 도시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생태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
-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 □ 편리한 선진도시

- 전국 어디서나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디나 갈 수 있는 도시교통환경을 조성
-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정보, 통신망을 조성

####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

- 자연과 인공이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조성
-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
- 아름답고 친근감이 있는 건축문화를 창출



-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전하고 계승하여 정체성이 있는 도시를 건설

**□ 재해에 안전한 도시**

-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호체계를 구축
-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관리

**2. 추진 및 건설과정**

일 자	추진과정
2004. 1. 16	-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포함 3대 특별법 공포(법률 제7062호)
2004. 7. 12	-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2004. 8. 10	- 주요 국가기관(행정부) 이전계획 확정·고시(추진위 고시 제2004-2호) -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확정·고시(추진위 고시 제2004-3호)
2004. 10. 21	-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판결 선고
2005. 3. 18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공포
2005. 5. 26	- 충남 연기·공주 및 충북 청원 지역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
2005. 10. 5	- 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단위기관을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고시
2006. 1. 1	- 건설청 개칭
2006. 7. 31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2006. 11. 29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확정
2007. 6. 29	- 행정도시 실시계획 승인 -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2009. 2. 26	- 행정도시 관련 헌법소원 선고(헌재) : 행정도시건설특별법상 예정지역 지정관련 조항(제11조 제2항)은 '합현', 토지등수용관련조항(제24조제2항)은 '각하'로 선고
2010. 12. 27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공포(2012. 7. 1 시행)
2012년 이후	-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 입주 개시
2030년	- 도시건설 완료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최종보고서(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 제작성

**3. 행정도시 건설 관련법 검토**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5. 3. 18)

**□ 목적(제1조)**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제2조)**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의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제6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제1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

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제17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기본계획의 수립(제19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배치방향
4.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재원조달방안
8.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개발계획의 수립(제20조)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수용계획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3의 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

4. 교통처리계획

5. 도시문화계획

6. 경관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9.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2. 재원조달계획

13.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실시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위원회 설치(제29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

#### □ 건설청의 설치 등(제38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2010. 12. 27)

□ 목적(제1조)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의 책무(제3조)

-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설치 등(제5조)

-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관할구역(제6조)

- 충청남도 연기군을 폐지한다.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간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록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제2절 관련계획 검토

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건설교통부, 2007)

1)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추진
-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을 충청권에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해 광역적 도시계획 필요

□ 법적근거

-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은 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수립

□ 수립 범위

- 공간적 범위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 시간적 범위 : 2005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2030년(행정도시 건설완료 시점)을 목표연도로 설정

2)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및 계획의 목표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 국제수준의 문화 창달과 국제교류 기능 등을 담당하는 21세기 동북아의 핵심 도시권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촉진하는 중추행정기능의 새로운 중심지
- 중심도시간 첨단산업·연구개발·교육의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어 도시혁신의 선도거점

□ 계획의 목표

- 국가중추행정 및 자족기능을 갖춘 거점권역 형성
- 21세기 문화 및 첨단산업의 혁신도시네트워크 구현
-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과 난개발·연담화 방지

3) 공간구조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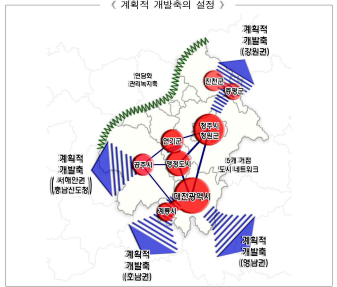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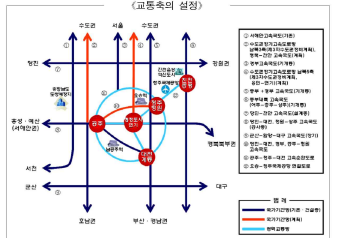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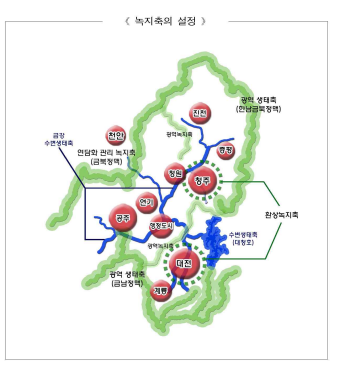
□ 공간구조 구상의 원칙

- 행정도시와 인근 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계획권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향후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 구축을 위한 공간구조 제시
- 행정도시와 기존 지역 중심지인 대전권·청주권을 통합하여 행정도시 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관리를 위한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정비와 배치, 수도권과의 연담화 지양 등 장기발전전략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한 공간구조 제시

□ 2030년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공간구조 : 통합적 거점 구축

- 중심도시 및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도시네트워크의 형성
- 산업구조 및 경제기반 개편을 위한 혁신 거점 육성
- 광역교통 연계망의 합리적 구축
- 광역계획권 도시 네트워크의 계획적 성장관리체계 구축

□ 개발·교통·녹지축 설정

구 분	구 상
<p>개발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축 : 행정도시에서 공주방향</li> <li>- 제2축 : 행정도시에서 계룡방향</li> <li>- 제3축 : 행정도시에서 대전도심을 지나는 방향</li> <li>- 제4축 : 행정도시에서 청주·청원을 지나 친철·증평방향</li> </ul>	<p>〈 계획적 개발축의 설정 〉</p> 
<p>교통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속순환교통체계 형성</li> <li>- 행정도시 관문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체계 구축</li> <li>- 행정도시와 거점도시간 효율적인 교통네트워크 구축</li> </ul>	<p>〈 교통축의 설정 〉</p> 
<p>녹지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의 연담화 및 주요도시간 연담화를 지양하고 생태계간 연계 체계화를 통한 녹지·생태·수변환경의 생태네트워크 보전체계 설정</li> <li>- 환경적·지형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금북·한남금북·금남정맥 등은 절대보전을 요하는 최상위 생태지형축이므로 광역생태축으로 설정</li> <li>- 대청호 수질관리, 금강 및 지류의 하천환경 보호를 위한 수변생태축 설정</li> <li>-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청주시 주변지역을 도심환상 녹지축으로 설정하고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녹지는 보전을 위주로 관리</li> </ul>	<p>〈 녹지축의 설정 〉</p> 

□ “광역계획권 5개 거점도시 네트워크”의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권역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광역계획권 전체	- 수도권 수준의 국가중추행정,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국제교류 등 (국가) 중심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하되, - 거점도시별 특화기능으로 상호 보완적인 네트워크 형성
행정도시·연기군	- 행정도시는 중앙행정, 국제교류, 문화, 지식산업 및 교육연구기능을 위주로 개발하여 광역계획권 내의 중추도시로 육성 - 연기군은 기존의 물류·산업·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CT·관광레저 등 도시적 서비스 기능 보완 및 동반성장 추진
대전광역시·계룡시	- 행정도시의 핵심적 배후도시로서 중앙행정 및 군사·국방, 과학기술 R&D, 금융·상업·물류 등 광역적 도시서비스지원 기능을 담당 - 풍부한 인구, 다양한 도시기능 및 우수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의 국토균형발전 촉진 기능 선도
청주시·청원군	-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오송역을 통한 행정도시의 관문으로 국제교류 및 광역적 도시서비스 기능 보완 - 오창과학산업단지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진천·증평→청주·청원→연기·행정도시→공주→대전으로 이어지는 첨단지식기반산업벨트의 중추 역할 수행
공주시	- 고속철도 남공주역을 통한 행정도시의 남서쪽 관문이자 광역권계획의 서부 거점지역으로 서해안 및 충남신도청예정지 방향 개발촉과 연결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설정 - 첨단산업 및 성장동력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보완하고 풍부한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광역적 문화거점으로 개발
진천군·증평군	- 동북부 거점지역으로 강원권 및 충북내륙권 방향 개발촉과 연결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설정 - 진천·음성 혁신도시 및 증평 항공우주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 혁신거점 역할 수행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건설교통부, 2006)

1) 계획의 개요

□ 계획의 성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인 동시에 도시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며, 아울러 향후 수립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준거가 되는 지표와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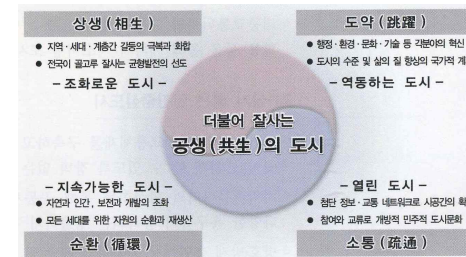
2) 도시건설의 목표와 추진방향

□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 도시건설의 이념 : 더불어 잘사는 「공생(共生)의 도시」 추구

- 건설목적에서 추구하는 구체적 이념인 상생과 도약, 그리고 순환과 소통을 축약하여 표현한 정신은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의 도시임



[그림 2-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건설 이념

□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복합형 행정·자족도시
- 쾌적한 친환경도시
- 살기 좋은 인간중심도시
- 품격 높은 문화·정보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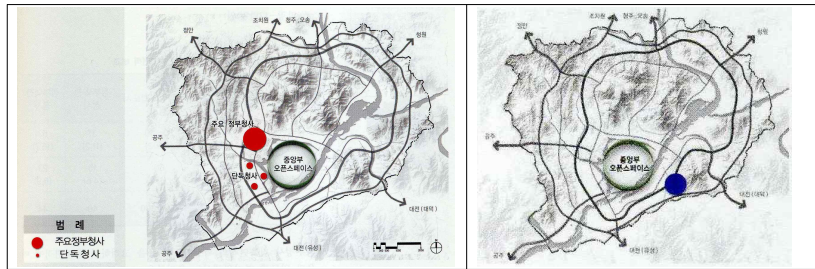
3) 이전대상기관 배치 기본방향

□ 중앙행정기관

- 입지요소별 검토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입지로서 적합한 지역은 중앙부 오픈스페이스의 북서쪽 지역과 서쪽지역으로 선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 중앙부 오픈스페이스 주변으로 배치하되, 도입되는 다른 도시기능들을 감안할 때 북서쪽의 중앙행정기관 인접지역과 금강 남동쪽의 대학·연구기관 인접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금강 남동쪽을 적지로 선정함



<중앙행정기관 입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입지>

4) 인구배치구상 : 단계별 인구배분계획

□ 초기활력단계(2007~2015)

- 최초 이주민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의해 초기의 도시개발 단계에서 15만인이 거주할 것으로 계획함
- 주요 수용기능으로는 첫마을 사업,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상업업무 서비스기능 등임

□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

- 자족적 성장동력에 의한 성장단계로 문화, 국제교류기능, 대학, 도시행정기능 등이 유입되면서 총 30만인이 거주하게 되는 것으로 계획함
- 주요 수용기능으로는 문화, 국제교류, 대학, 첨단지식기반산업, 의료휴양, 관련산업 등임

□ 완성단계(2021~2030)

- 국토균형발전 혁신거점으로 완성단계로 지식기반기능, 노인의료휴양기능 등, 도시기능의 도입이 완성되는 시기로 계획목표인구인 50만인의 유입이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함

5) 도시공간구조 구상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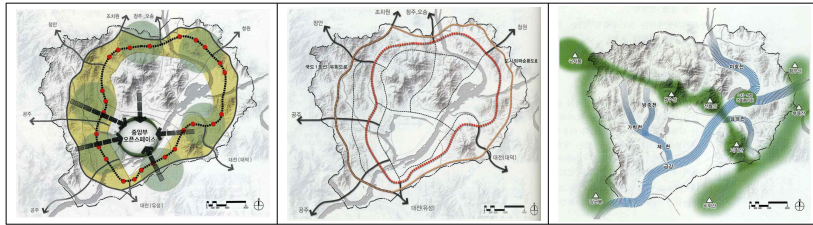
-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환상형 도시공간구조
- 중앙부 오픈스페이스를 공유하는 친환경 도시구조
- 균형 있는 접근이 가능한 도시기능의 분산배치

□ **교통망구상**

- 인간과 환경을 고려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함

□ **생태보전녹지축 구상**

- 산림녹지연결축 설정, 하천연결축 설정, 녹지-하천연결거점 설정



<도시공간구조 기본골격>      <교통망 기본구상>      <생태 및 공원녹지축 구상>

6) 도시기능배치구상

□ **도시기능 배치 고려요소**

- 광역적 기능 연계성, 도시기능의 이용자 범위, 도시기능 수용가능 면적, 조망 및 입지 상징성

□ **주요 도시기능 배치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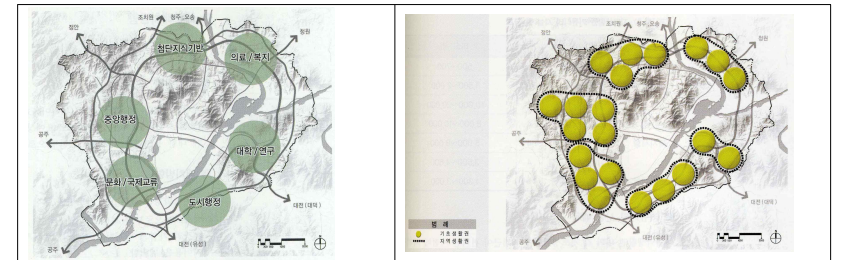
구분	입지고려요소	면적 (만㎡, 만평)	주요시설
중앙행정기능	광역접근편의성, 시민친화성, 상징성	30~40 (9~12)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
도시행정기능	일반시민 접근성 및 시민과의 교류	17 (5)	시청, 시의회, 경찰서, 법원, 교육청 등
대학·연구기능	대전광역시의 대학연구단지와의 연계성	25~30 (83~100)	대학 및 대학연구소, 국방대학, 이전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문화·국제교류기능	중앙행정기능과 연계, 수변공간 인접	17 (5)	호텔, 전시관, 미술관, 종합공연장 등
첨단지식기반기능	주변산업단지 연계성	83 (25)	지식기반산업, 기업연구소 등
의료·복지기능	양호한 자연환경	17 (5)	노인의료·휴양기능
일반상업업무기능	대중교통중심축 정류장에 연결하여 선형배치	165 (50)	복합쇼핑센터 등

7) 생활권 구상

□ **기본방향**

- 생활권은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배후 이용인구를 고려하여 위계별로 배치함
- 기초생활권 3~5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생활권을 구성하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망라한 권역을 대상으로 도시생활권을 구성하여 각 위계별 생활권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함



<주요 도시기능 배치구상>

<기초생활권 및 지역생활권 배치구상>

8) 계획지표 종합 : 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기본계획지표

부 문	관련항목	계획지표	비 고
인 구	목표 인구	50만인	2030년 기준
주 거	세대당 가구원수	2.5인/세대	평균치
	주택공급량	20만호	
	주거지밀도(순밀도)	300인/ha 내외	
	기초생활권 규모	2~3만인 내외	
상 업	기초생활권 개수	20개 내외	
	상업·업무	예정지역 면적의 3% 내외	국제교류, 호텔, 유통 등 포함
공 업	첨단지식기반시설 등	100만㎡ 내외	
	공원·녹지율	예정지역 면적의 50% 이상	공원·녹지, 하천 등 포함
녹 지	하천변 녹지 폭원	40m 내외	국가하천
		20m 내외	지방하천
	근린공원	1만㎡ 이상	기초생활권 단위
	표지공원	1개소 내외	도시생활권 단위
공공청사	중앙행정	20~40만㎡ 내외	12부 4처 2청 등
	지방행정 및 공공기관	60만㎡ 내외	이전대상 공공기관 포함
상하수도	1인당 1일 평균 급수량	300~350ℓ	
	하천(개회홍수빈도)	200년	국가하천
교 통	환상형 대중교통축(연장)	20km 내외	
	환상형 대중교통축(폭원)	40~50m 내외	자전거 및 보행공간 포함
	여객터미널	2개소 내외	
	대중교통전용지구 (Transit mall)	2~6개소	
	전국 주요도시 접근성	2시간 내외	
교 육	도로율	10% 내외	
	유치원	40개 내외	기초생활권당 2개소 내외
	초등학교	40개 내외	학급당 학생 수 20~25인
	중학교	20개 내외	
	고등학교	20개 내외	전문대학원 별도
	대학교	2개 내외	
문 화	주민복합문화시설	20개 내외	기초생활권 단위
	실내생활체육시설	20개 내외	
	박물관	각 1~2 개소	도시생활권 단위
	미술관		
	전문공연시설		
	중앙도서관(미디어테크)		
종합체육시설(Complex)			
복 지	근린아동복지시설	20개 내외	기초생활권 단위
	근린노인복지시설	20개 내외	
	종합장애인복지시설	각 1~2 개소	도시생활권 단위
	종합가족복지시설		

3.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

1) 계획의 기초

□ 계획의 개요

-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모델을 제시하고자하는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7)’의 내용을 수용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건설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세부계획을 작성함으로써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고 향후 수립될 실시계획 등의 준거가 되게 함

□ 계획의 전제 : 미래상(Visions)

- 복합형 행정자족 도시
- 쾌적한 친환경 도시
- 살기 좋은 인간중심 도시
- 품격 높은 문화정보 도시

□ 계획의 지표 : 목표인구

- 직접유입인구(정책적 유입인구) : 약 15~18만인
  - 이주민 : 약 1만인
  - 중앙행정 및 국책연구기능 : 약 3만 5천인
  - 첨단지식기반기능 : 약 10만인
  - 대학 및 의료복지기능 : 약 6천인
  - 국제교류기능 : 약 1만인
- 간접유입인구(자족적 유발인구) : 약 32~35만인 내외
  - 직접유발인구로 예측된 인구의 2배를 적용함



<표 2-1> 목표인구 설정종합(단위 : 인)

구 분	소 계	직접유입인구(정책적 유입인구)					간접유입인구(자족적 유입인구)
		이주민	중앙행정/국책연구	첨단 지식	대학/의료복지	국제 교류	
1단계	150,000	3,075	24,140	25,380	-	-	105,180
2단계	150,000	3,075	9,940	25,380	6,912	-	90,614
3단계	200,000	4,100	-	50,760	-	11,664	130,998
소 계	-	10,250	34,080	101,520	6,912	11,664	326,792
합 계	50만인내외	15~18만인					32~35만인

2)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계획

○ 기본방향

- 주요 도시기능은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를 따라 균등분산 배치함
-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를 지역생활권 간의 주요 활동축으로 설정하여 도시 활동의 연계를 도모함

□ 생활권 인구배분 및 주거지조성계획

○ 기본방향

① 생활권 인구배분

- 기초생활권은 주민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 사회, 문화, 체육, 복지, 근린편익시설 등의 기초수요를 감안하여 인구규모가 2~3만인 정도가 되도록 면적을 구성함
- 지역생활권은 기초생활권이 2~5개 정도가 되도록 하되 지형여건 및 지역생활권 공공편익시설의 이용권을 고려한 인구배분이 되도록 계획함
- 기초생활권 또는 지역생활권을 설정할 때에는 생활권별 자연조건과 경관, 도

시기능배치지역과의 관계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고 인구밀도를 조정하여 구체적인 인구가 배분되도록 함

② 주거지 조성

- 기초생활권 단위로 배분된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주거용지는 자연조건, 경관, 가로성격, 대중교통중심도로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입지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형태, 주택유형으로 계획함
-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를 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가로분위기 활성화와 야간에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를 계획함
- 주거단지에서는 생활가로를 조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합용도를 고려하고, 상업업무용지에서는 도심형주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
- 미래 소득수준의 향상과 가구구성 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주거선택이 가능하도록 주택유형과 주택규모를 설정하되 생활권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계획함

<밀도별·규모별 공급계획(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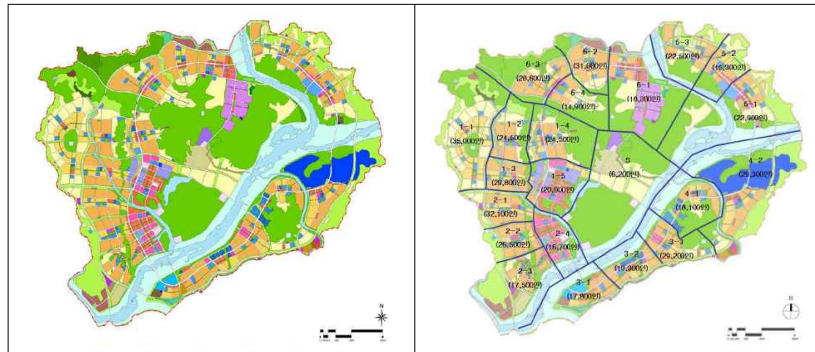
구 분	인구(인)	주택용지(천㎡)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 고
합 계	500,000	16,014	200,000	312	-
저 밀	38,510	4,764	15,404	81	7.7%
공동주택	461,490	11,250	184,596	410	100.0%
소형(60㎡미만)	158,751	2,756	63,499	-	34.4%
중형(60-100㎡미만)	188,425	4,913	75,371	-	40.8%
중대형(100-150㎡미만)	92,300	2,516	36,923	-	20.0%
대형(150㎡이상)	22,014	1,065	8,803	-	4.8%
중 저 밀	104,487	2,971	41,796	352	20.9%
소형(60㎡미만)	40,172	790	16,068	-	-
중형(60-100㎡미만)	45,833	1,357	18,336	-	-
중대형(100-150㎡미만)	12,790	505	5,116	-	-
대형(150㎡이상)	5,692	319	2,276	-	-
중 밀	315,325	7,502	126,129	420	63.1%
소형(60㎡미만)	118,176	1,957	47,270	-	-
중형(60-100㎡미만)	142,282	3,549	56,911	-	-
중대형(100-150㎡미만)	38,545	1,250	15,421	-	-
대형(150㎡이상)	16,322	746	6,527	-	-
고 밀	41,678	777	16,671	536	8.3%
소형(60㎡미만)	403	9	161	-	-
중형(60-100㎡미만)	310	7	124	-	-
중대형(100-150㎡미만)	40,965	761	16,386	-	-
대형(150㎡이상)	-	-	-	-	-

주)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임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구 분	합계	초기 활력단계 (~2015)	자족적 성숙단계 (~2020)	완성단계 (~2030)
인구수 누계(인)		172,508	305,325	500,000
주택수 누계(인)		69,002	233,130	200,000
합 계(호)	200,000	69,002	53,128	77,870
<b>저 밀</b>	15,404	1,481	2,005	11,918
공동주택	184,596	67,521	51,123	65,952
소형(60㎡미만)	63,499	19,947	19,257	24,295
중형(60~100㎡미만)	75,371	25,675	21,974	27,722
중대형(100~150㎡미만)	36,923	19,264	7,164	10,495
대형(150㎡이상)	8,803	2,635	2,728	3,440
중 저 밀	41,796	12,634	10,126	19,036
소형(60㎡미만)	16,068	4,857	3,893	7,318
중형(60~100㎡미만)	18,336	5,542	4,442	8,352
중대형(100~150㎡미만)	5,116	1,547	1,239	2,330
대형(150㎡이상)	2,276	688	552	1,036
중 밀	126,129	42,007	39,966	44,156
소형(60㎡미만)	47,270	14,929	15,364	16,977
중형(60~100㎡미만)	56,911	20,009	17,532	19,370
중대형(100~150㎡미만)	15,421	5,122	4,894	5,405
대형(150㎡이상)	6,527	1,947	2,176	2,404
도심형주택	16,671	12,880	1,031	2,760
소형(60㎡미만)	161	161	-	-
중형(60~100㎡미만)	124	124	-	-
중대형(100~150㎡미만)	16,386	12,595	1,031	2,760
대형(150㎡이상)	-	-	-	-

주) 주택규모는 전용면적기준이며, 저밀주택지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



<토지이용계획도>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 기본방향**

① 중앙행정기관

- 시민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주변의 도시활동과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함

-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토지용도와 혼합하여 분산배치하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관은 군집 또는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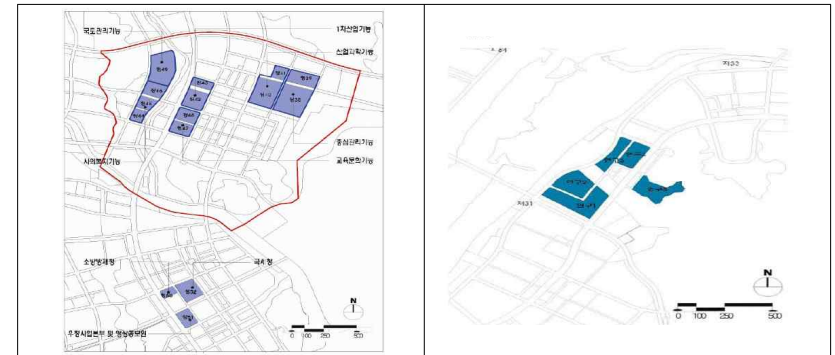
- 대중교통 정류장에 인접하여 배치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도록 함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이전되는 국가기능으로서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며 지역적 랜드마크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입지와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함

- 대중교통정류장과 인접시켜 배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지역생활권의 상업·업무기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혼합하여 배치함

-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여유롭고 독특한 분위기가 체험되도록 공원 녹지가 풍부하게 보이도록 배치함



<중심행정타운 배치계획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배치계획도>

**□ 자족성 확보계획 : 기본방향**

◦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생산자족기능과 생활자족기능을 도입함

- 광역도시권 차원에서 주변 도시와 역할을 분담하며, 중복된다 하더라도 경쟁되지 않는 기능과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국토 전체의 중심으로서 국토적 차원의 기능을 제공하는 중앙 행정기능과 더불어 국토 중심적인 문화, 국제교류, 연구 등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
- 지역경제권의 하나로서 첨단지식 기반산업기능을 도입하여 주변지역의 산업과 어울려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회, 문화, 복지, 교육, 체육 등 각 분야의 상위기능을 도시 내의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자족기능을 확보함

**<도시자족기능의 위계별 유형화>**

내 용	서비스 인구	도입기능	
도시적 기능 (Urban Net) 행복도시 및 주변지역 지원기능	50만	상업	근린상업, 기초생활편의시설,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등
		교육	초·중·고등학교, 자율혁신학교 등
		문화·체육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의료	병의원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역적 기능 (Regional Net) 충청권지원 자족기능	500만	상업	광역물류시설
		교육	대학, 전문대학원
		문화·체육	오페라하우스, 방송국, 신문사, 종합도서관, 골프장
		의료	전문병원, 특수병원
국토적 기능(National Net)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기능 수용	5,000만	산업	연구 및 벤처기업단지, 도시형첨단산업단지 등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제적 기능 (Global Net)	5억인	국제교류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호텔, 국제업무센터, 공항터미널
		교육	외국인학교, 영어마을, 외국대학분교 등

**□ 교통계획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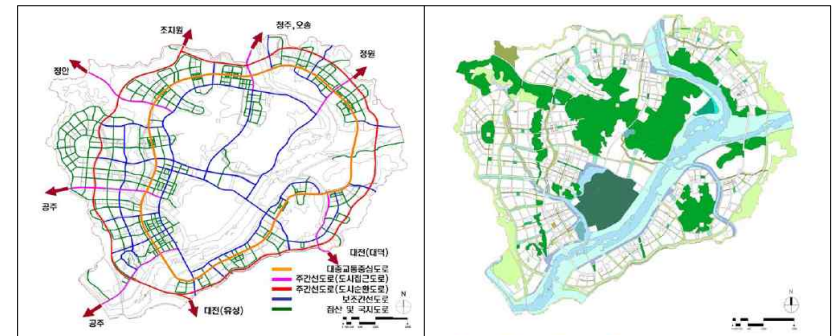
- 쾌적한 도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편리한 '대중교통중심도로'를 조성하고 자전

거 및 보행자도로를 연결하는 녹색교통도로망을 조성함

- 도시접근도로와 도시외곽순환도로를 접속시켜 지역간 통과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보조간선도로를 구축함
- 녹색교통 및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광로, 대로 위주의 도로망 구성을 지양하고 도시내부도로는 4차로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폭원이 확보되도록 계획함

**□ 환경보전 및 공원녹지계획 : 기본방향**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예정지역의 생태보전지역, 중앙녹지공간이 서로 연결되는 쉼기형 연결녹지 등 공원녹지체계를 구축함
- 자연생태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확보된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녹지 및 하천녹지는 주요 생물서식처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형 근린공원 또는 자연공원구역으로 계획함
-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자연공원 이외에 이들 녹지축·하천축과 연계되어 접근이 용이한 생활권의 중심위치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형 근린공원을 배치함
- 생활권별로 자연과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공원을 조성함



<기능별 가로망 계획도>

<공원·녹지>

□ **경관계획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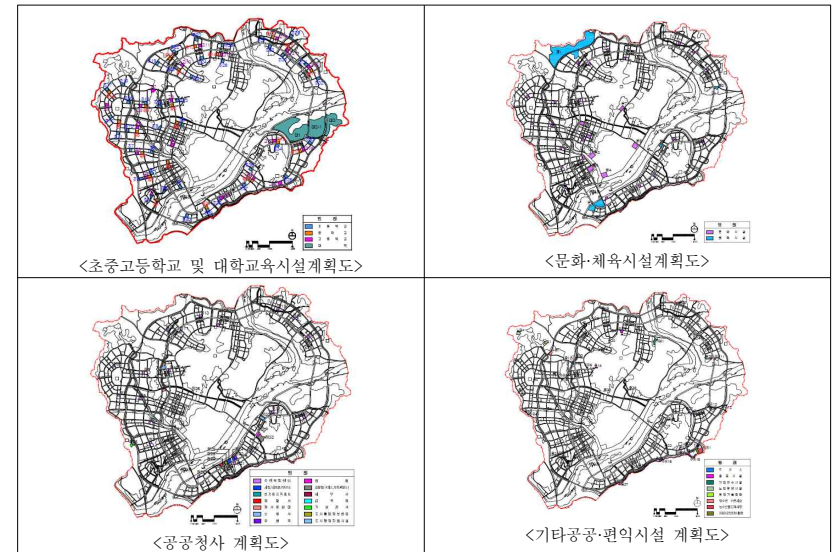
- 산과 하천 등 자연경관에 대한 시각적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축을 확보함
- 중앙녹지공간에서의 자연구릉과 어울리는 건축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도시경관을 조성함
- 주요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조성하여 도시의 중심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도시의 주요 기능지역에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특색있고 활기찬 가로경관을 조성함
- 하천은 보전·복원·친수공간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도심형 경관과 농촌형 경관을 복합화시킨 창의적 하천경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 시민생활과 밀접한 미시적 경관향상을 위해 건축물미관, 옥외광고물, 도시환경색채, 공원·녹지 및 수변공간, 공공시설물, 도시구조물 및 야간경관 분야의 경관 7대과제를 실시계획 및 도시계획조례 등에 반영함

□ **교육·문화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기본방향**

- ① **교육시설**
  - 공교육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준으로 하여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함
  - 우수한 대학을 유치하고 평생교육의 기반마련을 통해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초등학교는 기초생활권의 보행권내에 배치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 및 기초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함
- ② **문화·체육시설**
  - 기초생활권별로 커뮤니티 중심지역에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되 가능한 주민생활지원시설, 복지시설 등과 복합화하여 이용의 편의성과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

- 지역생활권별로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함
  -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함
- ③ **보건의료시설**
    -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공공보건의료를 조성하고 민간의료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함
    -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의 종합 의료시설을 조성함
  - ④ **복지시설**
    - 노인·아동·여성·장애인·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조성함
    - 복지관련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관련 세부기능 및 시설 중 통합이 가능한 시설들을 복합화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도록 함



---

## 제 3 장

---

### 행정도시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2절 충남과 충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3절 선행연구 종합

---

간지뒀면

# 제3장 행정도시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대전광역시, 2004)

#### 1) 과업의 개요

본 과업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국가 및 지역적 파급효과 및 영향을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이 대전의 위상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임

#### 2) 신행정수도 건설의 영향

##### □ 국토공간적 파급효과

- 인구 및 고용분산효과
- 교통접근성 개선
- 수도권 환경비용 절감 효과

##### □ 국민경제효과 및 지방분권화 촉진

- ① 국민경제효과
  -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
  - 건설산업 활성화
- ② 지방분권화 촉진

##### □ 사회 및 지역문화적 효과

- ① 사회적 효과
  - 서울제일주의 가치관 극복
  - 수도권은 경제수도로 발전
  - 국민통합에 기여
- ② 지역차원의 효과
  - 주민의 자긍심 상승효과
  - 지역 인프라 확충
  - 교육의 질적, 양적 개선효과
  - 고급문화의 향유효과
  - 생활질서의 향상 효과
  - 부동산 가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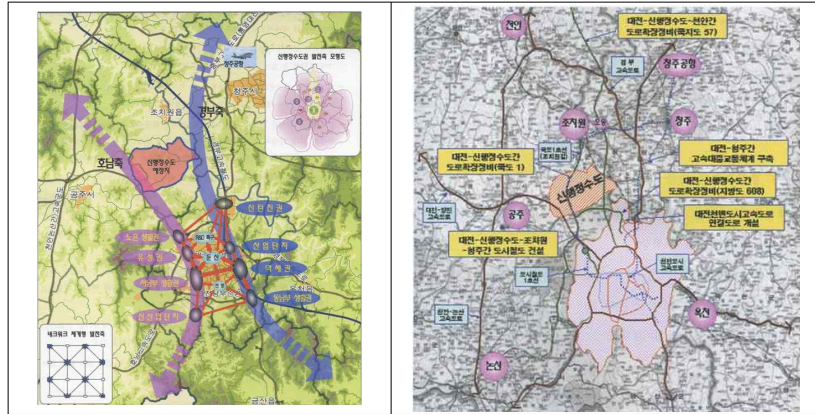
#### 3)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대응방안

##### □ 도시개발·교통부문

- ① 도시개발부문
  -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광역발전축 형성 구축
  - 광역도시차원의 성장관리
  - 도시발전축의 재정립
    - 서북부 지역의 경쟁력 있는 공간조성
- ② 교통부문
  - 신행정수도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
- 광역도로망 확충 정비
- o 효율성·편리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도시형 교통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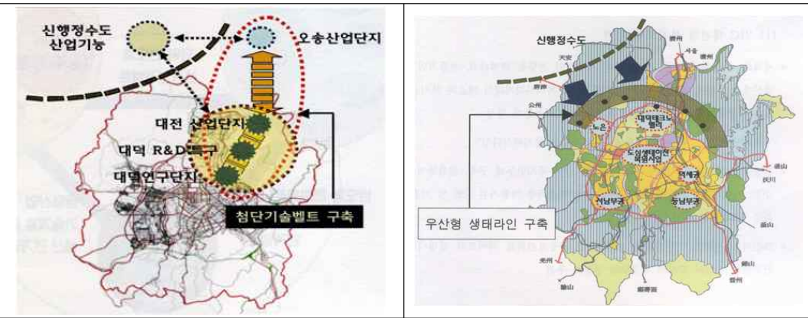
□ 지역산업 부문

- ① 대덕 R&D 특구 육성방안
  - o 21세기 한국과학기술의 산실로서 대덕의 기적을 이루는 과학기술 비즈니스메카 육성
- ② 지역산업 육성방안
  - o 충청권 첨단기술산업벨트 구축
  - o 지역산업육성
    -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첨단섬유소재·패션산업 활성화 사업,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영상특수효과타운 조성사업, 공예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지역형 실버벤처산업 육성사업
  - o 혁신주체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 o 지역혁신기반 확충
- ③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 환경·복지부문

- ① 환경부문
  - o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전형 환경도시 창출
  - o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자원·에너지 재생도시 조성
  - o 생태계보전과 복원을 통한 자연도시로 도모
    - 대전북부권역의 우산형 생태라인 조성



<신행정수도권 첨단기술벨트 구축도>      <우산형 생태라인 구축도>

- ② 복지부문
  - o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선도하는 21C 대전형 복지모델 “복지만두레” 실현
  - o 영유아 보육 수범도시 기반조성
  - o 노후생활 안정 및 보호체계 확립

□ 문화·교육부문

- ① 문화부문

- 신행정수도권 문화의 세계화
- 전통유교 문화의 창달
- 대학문화관련 교육의 강화(지원)
-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② 교육부문

- 대전지역교육의 질적 성장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 대전교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교육인프라구축

## 2. 대전광역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상생방안(대전발전연구원, 2008)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하여 인근도시의 공간적, 기능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제반영향을 파악하고, 대전이 갖고 있는 기회요소와 위험요소들을 분석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인근도시와 상생발전하기 위한 조건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도시의 삶의 질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도시들도 국가중추적 기능의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기능을 최대한 유치해 고용 자족성을 확보해야 한다.

###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영향 분석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긍정적 영향 분석

- 국가 전반적인 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과 서울 및 지방이 모두 함께 잘 사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충청권 공간구조적 측면의 기대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대전-청주-천안-아산-공주를 아우르는 충청광역도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하는 방어벽 효과가 있다.
- 충청권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충청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될 것이다.
- 충청권 문화·심리적 기대효과
  - '서울=중심, 지방=주변'이라는 고정된 인식이 해소될 것이다.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부정적 영향 분석

-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 편입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손실
-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한 인근 도시들의 공동(空洞)화 진행
- 주변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발전 잠재력 단절

### 4) 대전광역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상생방안

-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 대덕특구내 규제 완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 SOC 확충
- 각종 인프라의 공동 활용방안
-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방안

### 3.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도시와의 상생발전 전략 수립(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 1) 연구의 목적

- 행정도시 건설이 인근도시들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제반영향을 파악
-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들을 분석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광역권(행정도시와 인근도시)의 역할모델 수립
- 행정도시와 주변 지자체의 갈등요소의 실체와 이를 극복할 전략계획 수립
- 인근도시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쟁력 강화 전략계획 수립
- 인근도시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소프트웨어 전략계획 수립

####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영향 분석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긍정적 영향 분석

- ① 국가전반적인 효과
  - 국토 균형발전과 서울 및 지방이 모두 함께 잘 사는 효과
  -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문화기능의 분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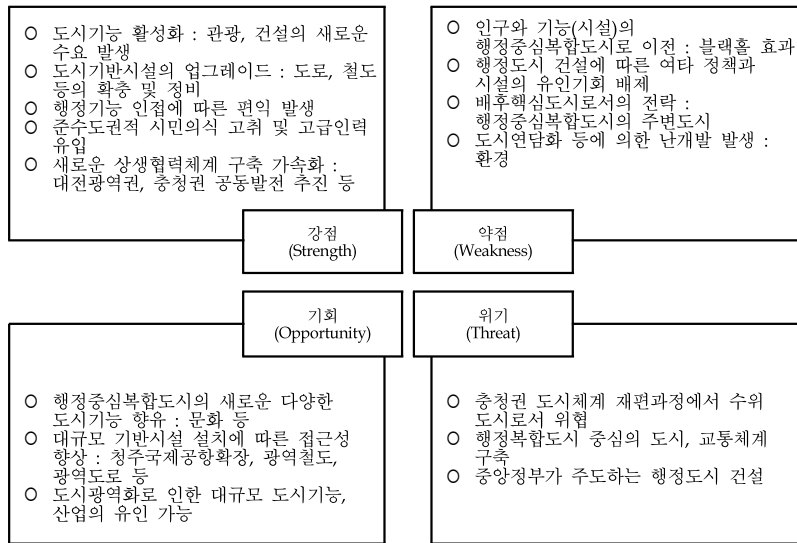
- ② 충청권 공간구조적 측면의 기대효과
  -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하는 방어벽 효과
  - 충청권에 수도권의 중앙부처가 이전함으로써 인해 관련기능을 수도권에서 분산을 유도하는 흡수효과
  - 행정도시 접근성이 개선되어, 통행시간비용과 물류비용 등의 교통비용 절감효과
- ③ 충청권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충청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
  - 충청권 지역경제가 활성화
- ④ 충청권 문화·심리적 기대효과
  - '서울=중심, 지방=주변' 이라는 고정된 인식을 해소
  - 행정도시 주변도시에 소재한 대학들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
  - 외국인들의 방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부정적 영향 분석

- ① 현재 직접적으로 초래되고 있는 부정적 영향
  - 행정도시구역 편입 지자체의 행·재정적 손실
    - 행정도시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자체의 경우 면적과 인구의 상실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력 위축
    - 교부세, 지방세 등 손실
  - 행정도시 편입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행위제한, 토지거래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타격
    -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충남도청 이전과정,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등 대단위 국가사업에서 제외
    -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② 향후 예견되는 부정적 영향

- 행정도시로 인한 인근 도시들의 공동화 진행
  - 행정도시와 인근도시들의 질적수준의 격차에 따른 빨대효과(Straw Effect) 현상 발생 우려
- 주변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정도시 발전잠재력 단절
  - 광범위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정도시 건설지역을 차단함으로써 개발시너지 효과 차단



3) 상생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사업 및 공동협력사업

□ 상생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사업 : 충청과학산업벨리 조성사업

① 충청과학산업벨리의 개념

- 행정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3개 거점으로 상호 연계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과학산업 집적 지역

② 충청과학산업벨리의 지리적 범위

- 1단계 초기 조성 : 행정도시 전역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그 연접지역이 포함된 삼각형 지역
- 2단계 확장 : 주변의 연기, 공주, 계룡, 청주, 청원 지역을 포괄하는 다이아몬드지역
- 3단계 확장 : 천안, 아산, 음성, 진천 등을 포함하는 충청권 전역

③ 개발방향

- 다핵심 네트워크형 개발
  - 일극집중형 개발이 아니고, 대덕, 오송, 행정도시의 3개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삼각거점별 기능 특화와 동시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꾀함
- 단계적 개발
  - 1단계에는 3개 거점 위주로 개발하지만 향후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산
- 민간 활력을 적극 활용
  -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므로 공공은 초기 선도투자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민간활력을 최대한으로 활용

□ 행정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① 행정도시권 문화관광루트 조성사업

- 행정도시-백제문화권-내포문화권-대전의 온천과 과학기반 문화관광-청주의 고인쇄문화 등 전통과 미래 문화관광 벨트 구축

② 백제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사업

- 공주역사예술도시 정비, 공주관광단지 개발정비사업, 고마나루 명승지역 개발
- 부여백제역사도시 정비, 부여문화관광 도시 조성, 부여 고도 기반 조성

- ③ 행정도시권 거점관광지 조성사업
  - 백제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지 조성
  - 대청호반 청남대 및 초정지구의 세계적 관광명소화 추진
  - 갑천 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 SOC 확충

- 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사업
  - 자유공항 지정 등
- ② 행정도시와 주변도시 공동이용 교통 SOC 확충사업
  - 충청고속도로(강원권 연결) 신설
  - 청주(중평)~행정도시간 LRT 신설
  - 청주~대전(신탄진)간 LRT 신설
  -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연장 : 행정도시 -> 대덕밸리 IC 구간
- ③ 다목적 복합형 컨벤션센터 건립
  - 충청권을 대표하는 국제규모의 전시 및 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 건설
  - 컨벤션센터 내 전시기능 및 숙박 기능 조성

□ 금강 유역권 개발사업

- ① 금강 뱃길 복원사업
  - 금강 옛 뱃길을 복원, 백제권 역사문화의 자긍심을 살리고, 수질개선 등을 통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 ② 금강권 광역복합개발사업

4. 세종시와 대전시의 미래(조명래, 2010)

1) 세종시 미래의 최소치와 최대치

세종시 원안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를테면 9부 2처 2청을 포함한 53개의 공공기관을 단계별로 옮기고, 세제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관련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의 이전을 유인해 내는 그래서 신도시 하나를 적절히 만들어내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원안다운 세종시를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다. 이 경우 최종 완성될 세종시는 유령도시는 아닐지라도, 과천과 같은 소박한(인구 10-20만 정도의 주거중심) '행정타운'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세종시 미래의 '최소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종시로는 당초의 목표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중추거점도시가 될 수 없다. 이전한 국가중추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산업,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 거점기능'을 실제적이고 공세적 방식으로 조성될 때에만 원안다운 세종시가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 국토의 새로운 중추거점 기능을 갖춘 인구 50만의 세종시는 미국 와싱턴과 같은 행정수도과 같은 도시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는 세종시 미래의 '최대치'라 할 수 있다.

2) 세종시와 대전시의 관계 전망

첫째는 신생도시로서 세종시에 대한 대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관계, 즉 '비자립적 신생도시 세종시'와 '후견인 도시 대전시'와의 의존관계이다. 이는 아마 초기관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세종시와 대전시가 상호 협력 및 경쟁을 동시에 하게 되는 역할관계다. 상호협력은 각 도시가 갖고 있는 차별적 기능과 역할이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상호보완하는 관계라면, 상호경쟁은 유사한 기능의 입지를 두고 서로 선점하려는 가운데 경쟁력과 중심성이 강한 지역으로 상대 도시의 기능 일부가 유출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중반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세종시와 대전시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상생하는 역할관계다. 이는

세종시 건설을 통해 집중되는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기능을 역할 분담을 통해 특화하면서 광역적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해 가는 관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세종시가 계획대로 완성되는 후기 단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양 도시간 관계유형은 세종시 건설이 소극적,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단순한 '행정타운'으로 조성되느냐 혹은 원안의 취지대로 적극적, 실체적으로 추진되어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조성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만 내외의 '행정타운'으로 건설되면 세종시는 자립기능이 부족하여 대전시의 도시서비스에 의존하는 기생도시가 될 것이다. 반면 당초 취지대로 국토의 새로운 중추거점도시로서 세종시가 공세적이며 실체적으로 조성되면, 이 경우 대전시는 도시기능의 일부가 서로 유출되는 것을 겪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가적 차원의 공간발전 동력이 세종시 일원에 집중되어 대전을 포함한 인근지역 전체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표 3-1> 세종시 도시형성 방식의 차이에 따른 '세종시-대전시관계'의 전망 차이**

	세종시(행정타운)-대전시		세종시(행정수도)-대전시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초기	- 세종시 초기 이주자 다수의 대전 정착 - 세종시 주민들의 대전시 상업, 교육, 의료 서비스 이용	- 세종시의 초기인프라 형성지체 - 대전시에 대한 세종시 의존패턴 구축	- 세종시 건설의 강력 드라이브로 처음부터 정주여건 조성 - 대전의 도시서비스에 대한 최소 의존	- 세종시의 영향 크지 않음
중기	- 세종시는 대전 과학기술의 분공장화	- 세종시에 대한 대전시의 후견인 역할 고착 - 세종시의 도시형성 부진	- 세종시의 고차서비스업과 대전의 도시서비스업 간 분업 - 대덕-세종-오창 간 과학 비즈니스벨트의 트라이앵글화	- 대전시 첨단과학 기능 일부의 세종시로 선별적 유출
장기	- 세종시는 대전 신시가지 일부로 기능	- 세종시의 중추거점 기능 부재로 대전의 숙박도시화, 소비형 도시산업의 집중 - 대전시 공간구조의 왜곡(예, 서부지역의 개발집중)	- 세종시에 국가적·국제적 중추기능 집적 - 세종시-대전시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형성 - 세종시-대전시의 광역도시권화	- 대전시 산업 일부(국제, 첨단기술, 교육 등)의 위축

### 3) 세종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대응역할

세종시와의 상생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은 세종시가 최대치, 즉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조성되고 기능하는 것을 돕고, 또한 그로부터 대전시 스스로가 새로운 도시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 초기활력화 단계 : 배후(후견인)도시로서의 역할

초기 이주자의 다수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서비스를 15-20분 떨어진 대전시에서 공급받고자 할 것이다. 이는 대전 북부나 서부지역(노은지구, 도안신도시지구 등)이 세종시 초기 이주자들의 대체 주거지나 교육, 의료 등 대체 서비스 공급지로 역할하게 됨을 의미한다.

세종시 초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우면서 광역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주거·문화·교육·상업·의료·관광 등의 도시계획부문은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는 (가칭) "세종시건설 지원특별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 중기 자족성숙단계 : 거점기능 형성을 위한 경쟁·협력도시로서 역할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53여개의 이전이 완료되면, 세종시는 나름대로 자족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된다. 이때부터 세종시와 대전시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동시에 갖게 된다. 이런 단계에서 대전시의 핵심역할은 세종시와 경쟁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광역권의 거점도시로서 역량을 갖추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 정부청사지구를 재정비하고, 세종시의 중앙행정기능과 업무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 동구를 중심으로 광역도시권을 커버하는 중심업무 및 국제비즈니스 기능(금융, 정보처리, 국제교류, 컨설팅 등) 확충
- 세종시에 인접한 서남부지역은 세종시에 버금가는 첨단복합주거단지(예, 유비쿼터스지구) 조성, 대전권으로 유입하는 거주인구 수용
- 유성일대를 쇼핑, 위락, 여가활동의 첨단집적지구로 재정비

-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사교육이 불필요한 청정교육지구 조성
- 세종시와 가까운 북서부 지역에 저탄소 첨단산업지구(예, 신동지구)를 조성하여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의 중추역할을 하도록 함
- 세종시와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대대적 확충
- 대전시가 주도하여 대전 동남권에 광역물류거점 조성, 대전역-세종시-오송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노선 구축, 대전시와 세종시의 경계인 충남연기에 호남 고속철 거점역(용포역) 설치, 대전을 중심으로 관통하는 호남선, 경부선, 대전선을 활용해 계룡시-신탄진 남북철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함
-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종시건설지원팀을 발전적으로 해체해 '(가칭)대전시경쟁력기획단'으로 재설립

**□ 장기 완성단계 : 광역적 도시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역할**

이 단계에서 대전시의 선도역할을 세종시와 대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도권의 대항권역을 만드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 대전시는 엑스포공원 등에 국제컨벤션센터, 다국적기업 지사, 국제교역 및 교류관련기관 등을 집중 유치해, 세종시의 국제비즈니스와 하나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 대전시는 이와 연동하여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비즈니스 기능을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감미하여, 경쟁력 있는 '과학문화산업'으로 육성해 대전의 경쟁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 대전시도 도심형 복합의료서비스지구를 조성해 광역권 차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는 '대전시 경쟁력 기획단'을 '(가칭) 대전광역도시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해야 할 것이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 영향(국토학회, 2010)<sup>1)</sup>**

1) 세종시 주요 도시기능 단계별 도입 로드맵(안)

구 분	1단계 (2010~2015)	2단계 (2016~2020)	3단계 (2021~2030)
행정 공공	1.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36개 기관)(2012년~2014년,면적 0.4km) 2. 지방행정기관(시청사, 시의회, 법원, 경찰청, 119 안전센터) 3. 공용의 청사 4. 묘지공원(은하수공원)	1. 119 안전센터 2. 생활권 공용의 청사	1. 소방서(50만) 2. 농업기술센터 3. 농수산물 도매시장 4. 지동차운전면허시험장 5. 보건소(50만) 6. 기상관서(50만)
산업	1. 월산산업단지(0.86km)	1. 첨단산업연구단지, 벤처기업전용단지 2. 태양광산업(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장비, LED 조명)	1. 세종 R&D센터, 기술박물관(0.13km) 2. 도시형첨단산업단지 3. 테크노파크 4. 의료정밀광학기기, 영상음향통신장비, 사무기기, 출판인쇄 매체업 5. 바이오신약 6. 테스트베트단지 조성
도시 핵심 기능	1. 중앙행정 : 면적 4,32km <sup>2</sup> , 134,278명, 53,711세대 2. 문화·국제교류 : 면적 2.43km <sup>2</sup> , 85,615인, 34,246세대 3. 도시행정 : 면적 1.65km <sup>2</sup> , 63,078인, 25,231세대 4. 대학연구 : 면적 1.26km <sup>2</sup> , 47,440인, 18,976세대	1. 의료복지 : 면적 1.23km <sup>2</sup> , 35,865인, 14,346세대 2. 첨단지식기반 : 면적 2.01km <sup>2</sup> , 63,096인, 25,239세대	1. 의료복지 : 면적 0.70km <sup>2</sup> , 20,782인, 8,313세대 2. 첨단지식기반 : 면적 0.76km <sup>2</sup> , 27,111인, 10,844세대 3. 유보지 개발
교통	1. 외곽순환도로(2014년)(2012년) 2. 대중교통순환도로(BRT)(2014년) 3. 조치원 연결도로(1축, 2011년) 4. 오송 연결도로(2축, 2011년) 5. 대전 외삼동(5축, 2012년) 6. 대전 대덕테크노밸리(4축, 2013년) 7. 정안IC 연결도로(8축, 2013년)	1. 외곽순환도로(2017년 이후) 2. 청주시 연결도로(2017년 이후) 3. 공주시 연결도로 확장(7축, 2017년 이후) 4. 청원IC 연결도로(9축, 2017년 이후) 5.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1축, 2017년 이후) 6. 공주 연결도로(6축, 2017년 이후) 7. 호남고속철도 건설(2017년)	1. 세종시-고속철도 남공구역(호남고속철도 개통시) 2. 충청선 철도(조치원~보령) (2006년 예비타당성중)

1) 자료출처 : 대전광역시

구 분	1단계 (2010~2015)	2단계 (2016~2020)	3단계 (2021~2030)
도시 핵심 기능	사업·업무 1. 생활권 지구·지역산업 (할인점, 복합쇼핑몰) 2. 중앙행정 : 면적 15천㎡, 675명, 270세대 3. 문화·국제교류 : 면적 79천㎡, 3,423인, 1,369세대 4. 도시행정 : 면적 76천㎡, 3,323인, 1,329세대 5. 대학연구 : 면적 37천㎡, 1,610인, 644세대	1. 스트리트형 복합쇼핑몰 2. 특화거리 3. 유틸리티스 광장 4. 상업문화복합시설 5. 의료복지 : 면적 65천㎡, 2,830인, 1,132세대 6. 첨단지식기반 : 면적 44천㎡, 1,932인, 773세대	1. 백화점 2. 어반아트리움 3. 전문과학기술 콤플렉스 4. 금융보험업 5. 정보산업 6. 파크형 콤플렉스 7. 의료복지 : 면적 14천㎡, 610인, 244세대 8. 첨단지식기반 : 면적 14천㎡, 597인, 239세대
도시 지원 기능	의료 1. 생활권 기본 의료·복지 시설	1. 생활권 기본 의료·복지 시설 2. 대형 종합병원(중앙행정 권역) 3. 노인전문병원 및 복지관 4. 종합장애인 복지시설	1. 대학병원 2. 대형 종합병원(2개소) 3. 첨단의료 연구시설 4. 실버타운
	컨벤션	1. 게스트하우스 2. 호텔	1. 복합형 컨벤션센터 + 전시장 (예: 서울 COEX, 부산 BEXCO) 2. 호텔
	문화·레저	1. 도시통합정보센터 2. 도시건축박물관 3. 유틸리티스 체험장 4. 야외 전시시설 5.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 진흥지구	1. 종합체육시설(국제경기) 2. 광역 근린공원(중앙녹지 공간) 3. 오페라하우스 4. 국가기록박물관 5. 대통령기록관 6. 디지털정책 정보도서관 7. 대형 복합공연장 및 운동장 8. 대규모 미술관 9. 대한민국 홍보관 10. 미디어복합단지

## 2) 도시핵심기능 영향분석

기능구분	1단계 초기 활성화 (2010~2015)	2단계 자주적 성숙 (2016~2020)	3단계 완성단계 (2021~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후지원기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보완적 도시기능 배분</li> </ul>
주거	주거외 서비스 등에 대한 보완이 될 때까지 대전이 우위를 점함	수준 높은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거주자가 입주하고, 관련 상업업무 활동을 위한 인구가 유입되어 주거부문의 특화도는 동등한 수준 될 것으로 전망	우수 주거시설의 완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일부 시민의 유출이 발생
	우 세	대 등	대 등
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R&D 산업에 특화됨	전략업종 부재 및 유치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종시의 산업기능은 대전시, 청주 산업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배후 수준에 못 미칠 것임(중소기업은 분양가가 저렴한 공주, 논산, 청원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으로 전망)	과학기술과 녹색산업(월산 산업단지)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매우 우 세	우 세	대 등
사업·업무	기존 도시의 상업 수요를 어느 정도 끌어들이 가능성 있으나 공공행정기능 및 각종 업무시설의 집중으로 다른 도시로의 통근량은 많지 않을 것임	중심행정기능의 이전으로 인한 거주민의 유입이 상업업을 활성화시키지만 대전지역의 업무기능이 유출되어 업무특화도가 동등한 수준이 될 것임	고급상품의 판매·취급 활동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상호보완 구조를 형성할 것이며, 행정업무 및 연구 관련 인구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우 세	우 세	대 등

기능별	1단계 초기 활성화 (2010~2015)	2단계 지주적 성숙 (2016~2020)	3단계 완성단계 (2021~2030)
		• 배후지원기능 강화	• 상호보완적 도시기능 배분
국제교류	국제적인 컨벤션 기능과 서비스기능이 지원되는 호텔기능 필요	세종시의 국제교류 기능이 활성화되어 대전시의 컨벤션 기능과 관련 서비스기능이 일부 유출될 것으로 전망	세종시의 연계체계 활성화는 국제교류국가가 증가로 이어져 컨벤션 기능은 대전과 동등 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우 세	대 등	열 세
교육	초·중학교 교육은 세종시 자체적으로 수용이 되나 고등학교·대학교 등의 기능은 대전시가 우위를 점함	고려대와 카이스트의 입지로 인한 첨단과학분야의 특화도가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특하고, 대학교 등의 정차으로 유성~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되는 우수한 교육벨트를 형성하여 대등한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우 세	우 세	대 등
문화·예술·여가·체육	일상적인 문화시설은 충분할 것이나, 대규모/고급 문화시설의 공급은 부족하고, 공공업무로 특화된 도시의 성격상 대규모 고급 레저시설의 부족이 예상	세종시에서 향유하지 못하는 다른 형태의 문화체험 기회와 활동으로 인해 특화되며, 인공호수, 중앙공원 등을 활용한 생활형 레저활동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수준 높은 박물관, 미술관, 전문공연시설, 종합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통해 문화분야의 특화도는 높아지고, 중앙공원, 4대강과 연계한 수변레저 프로그램 다양화로 레저관련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우 세	대 등	열 세
보건복지	대전 및 청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의료 기능(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복지 여건의 미비로 대전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	세종시 인구증가에 대응한 종합의료시설 부재로 인해 대전시의 의료기능은 지속적인우세가 전망되며, 세종시 복합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아동 및 여성복지는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세종시 종합의료시설 유지와 도시성장의 성숙으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기능이 대전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우 세	우 세	대 등

### 3) 주요 기능별 대응방향

#### □ 도시핵심기능

부문별	대응방향 사업	검토부서
주거기능	• 도안신도시(2단계) 택지개발사업 • 노은지구 생활주택 공급대책 마련 • 다양한 수요층에 대한 차별화된 주택공급대책 마련	주택정책과
교통기능	•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조성사업 • 신규 유성터미널과 세종시 연결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사업 • 세종시~유성지역간 연결도로의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시철도기획단 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상업업무기능	• (기존도심강화) 경부고속도로 대전역세권, 도시철도역세권 개발 대책마련 / 도시상업 활력 및 업무시설정비를 위한 전략사업 • 둔산 신도심 강화 • 유성부도심 : 관광, 온천 중심의 위락기능의 문화 업무시설 기능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공간체계 구성사업(세종시→노은→유성 도안신시가지·둔산 신도심)	도시재생과
산업기능	• New IT, 의약바이오, BIGT, CT 등의 국가 성장동력의 세종시와 대덕R&D 연계사업 유치전략 • 네트워크 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주체간 지속적 워크숍개최 • 대덕산업단지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비	과학산업과 대덕특구과

#### □ 도시서비스 기능

부문별	대응방향 사업	검토부서
컨벤션기능	• 스파, 중소규모 컨벤션, 의료 등을 연계한 관광특구 실천전략	관광문화재과 문화산업과
문화기능	•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대전시립미술관 등 주변 문화클러스터 정비사업 / 국제문화체육경기 추진전략	문화산업과 체육지원과
교육기능	• 대전시의 기반 교육환경을 강화하고 미래형 선진교육 인프라구축사업	국제교육담당관실
의료기능	• 의료벨빙 관광도시 조성(유성스파케어 기능강화)	보건정책과 관광문화재과

## 제2절 충남과 충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발전전략(충북개발연구원, 2005)

- 전략과제 1 : 충청중앙권 어반 클러스터(Urban Cluster) 형성
- 전략과제 2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 기능분담
  - 대전광역시는 수도권과 영·호남권을 연결하는 충청권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구나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청 단위의 국가행정 기관(둔산의 제3청사), 과학기술연구단지, 국방(계룡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컨벤션 기능과 멀티미디어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능분담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청주공항의 국제관문기능, 정부대전청사의 행정기능, 대덕연구단지의 R&D 기능 등을 행정도시 기능과 연계하여 행정도시 광역도시권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전략과제 3 :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와 연계체계 구축
- 전략과제 4 : 오송·오창단지의 집중육성과 클러스터 조성
- 전략과제 5 : 행정도시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 청주국제공항을 행정도시 관문공항으로 기반 확충
  - 오송-강릉간 KTX 건설
  - 행정중심도시 중심 광역도로망 건설
- 전략과제 6 : 교육·문화·관광 활성화 전략

### 2. 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방안(충남발전연구원, 2010)<sup>2)</sup>

2) 세종시와 충남의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2010, 충남발전연구원)

#### 1) 공간적 연계를 통한 공동발전 전략

- 세종시와 충청광역경제권간 공동발전
- 세종시와 초광역벨트간 공동발전
- 세종시와 신성장거점도시와 공동발전
  - 세종시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은 공동적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건설 중임
  - 이러한 충남의 신성장거점도시들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도시개발보다 도시의 특성에 기반하여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세종시와 충남 농어촌연계 공동발전
  - 세종시와 충남지역 농어촌지역의 기능특화 및 연계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공동발전 체계를 구축함
  - 세종시와 충남 농어촌간 도농교류를 통한 상호학습 및 체험활동, 기술, 정보 및 인력교류, 도시기반시설 공동이용 등을 활성화함
  - 세종시와 농어촌간 교류협력은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 및 재정지원을 제공함

#### 2) 기능적 연계를 통한 공동발전 전략

- 기업 및 산업연계를 통한 공동발전
- 대학 및 교육을 통한 공동발전
- 협력과 제휴를 통한 공동발전
- 광역기능의 상호이용을 통한 공동발전 전략
  -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거점들을 상호 연결하는 교통망 체계와 통합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점간 공동이용, 종합이용, 상호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광역시설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여 세종시와 충남도간의 협력



체계 구축함

- 문화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공동발전

### 3. 세종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방안(강현수, 2010)<sup>3)</sup>

#### 1) 국가전체의 긍정적 효과

- 국토 균형발전과 서울 및 지방이 모두 함께 잘 사는 효과
-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문화 기능의 분산효과
- 전국적 접근성 개선 효과

#### 2) 충남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 세종시 건설로 인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도권=중심, 충청권=주변'이라는 고정관념 해소
- 세종시 주변도시에 소재한 대학 및 기업들에 대한 선도호가 증대

#### 3)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

- 세종시 행정구역 편입 지자체의 행·재정적 손실
- 세종시 편입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 4) 향후 예견되는 부정적 영향

- 세종시로 인한 인근 도시들의 공동(空洞)화 진행

- 세종시와 인근도시들의 도시 질적 수준의 격차에 따른 이른바 빨대효과(straw effect), 역류효과(backwash effect) 현상 발생 우려
- 세종시가 최고의 도시계획과 건설 투자로 인하여 인근 도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의 질이 기대되기 때문에, 인근 도시들의 주민들이 세종시로 이주함에 따른 인근도시의 공동화 우려
- 인근 도시의 중산층일수록 더욱 좋은 환경을 찾아 세종시로 이주 가능성 높음
- 세종시와 인근도시 간의 삶의 질 격차가 높을수록 이주 가능성은 더욱 높음
- 인근 도시들의 주택가격과 세종시의 주택가격이 동등한 수준이 된다면, 인근도시들의 거주민들이 생활환경이 우수한 세종시 이주를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 주변지역의 규제로 인한 발전 잠재력 단절

#### 5) 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과 목표

- 우선 세종시 자체 자족성 확보
-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역할 분담
- 세종시와 인근도시의 삶의 질 격차 해소
- 세종시와 인근도시의 갈등 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3) 세종시와 충남의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2010, 충남발전연구원)

### 제3절 선행연구 종합

#### 1. 행정도시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야		영향 및 효과
긍정적 측면	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균형발전(서울, 지방 모두 win-win)</li> <li>수도권 집중기능 분산효과</li> <li>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충청권에서 차단효과</li> <li>서울=중심, 지방=주변이라는 인식해소 : 국민통합에 기여</li> <li>수도권 환경비용 절감효과</li> <li>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li> <li>건설산업 활성화</li> <li>전국적 접근성 개선효과</li> </ul>
	충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권으로의 부처이동으로 분산효과 발생</li> <li>행정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통행시간, 물류비용 등 교통비용 절감</li> <li>충청권 인구유입</li> <li>충청권 지역경제 활성화</li> <li>생활의 질 향상 : 고급문화의 향유</li> <li>세종시 주변지역 소재 대학 및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 증가</li> </ul>
부정적 측면	국토	-
	충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입지자체의 행·재정 손실</li> <li>행정도시 편입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li> <li>행정도시로 인한 인근도시들의 공동화 진행(빨대효과) : 인구유출</li> <li>주변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정도시 발전잠재력 단절</li> <li>컨벤션 기능과 관련 서비스기능 유출</li> </ul>

#### 2. 행정도시 건설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분야	상생발전 방안
도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발전축 형성</li> <li>광역도시차원의 성장관리</li> <li>대전역세권, 도시철도역세권 개발</li> <li>충청중앙권 Urban Cluster 형성</li> <li>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 기능분담 : 각 도시별로 특성 부여</li> <li>행정도시와 기업 및 혁신도시와 연계체계 구축</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 서남부지역을 첨단복합주거단지로 조성 : 대전권으로 유입하는 거주 인구 수용</li> <li>대전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 노은지구 생활형주택 공급대책 마련</li> </ul>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성일대를 쇼핑, 여가활동의 집적지로 조성</li> </ul>
산업(대덕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덕특구 활성화</li> <li>대덕특구내 규제 완화</li> <li>충청과학산업벨리 조성사업</li> <li>대전 북서부 지역에 저탄소 첨단산업지구 조성</li> <li>충청권 첨단기술산업벨트 구축</li> <li>대덕산업단지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비</li> <li>오송, 오창단지의 집중육성과 클러스터 조성</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중심복합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 행정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li> <li>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li> </ul>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li> </ul>
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 SOC 확충 : 행정도시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li> <li>각종 인프라의 공동활용 방안</li> <li>도시철도 1, 2호선 조성</li> <li>세종-유성간 첨단교통, 자전거네트워크 구축</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북부권역의 우산형 생태라인 조성</li> </ul>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시 건설지원팀, 대전시 경쟁력기획단, 대전광역시도시관리단 등 순차적으로 조직개편</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방안</li> <li>금강유역권 개발사업</li> <li>도심형 복합의료서비스지구 조성 의료서비스 제공</li> <li>엑스포에 국제기능 유치 : 세종시와 네트워크</li> </ul>

---

### 3. 선행연구의 접근방법 및 한계

행정도시가 대전시 또는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세종시와 신성장거점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별적 도시개발보다는 도시특성에 기반한 연계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 세종시와 충남 농어촌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충남지역 농어촌의 기능특화 및 연계(상호학습, 체험활동, 인력교류 등)를 통해 도시와 농촌 공동발전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며,
- 세종시와 인접도시간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거점들을 상호 연결하는 교통망체계와 통합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광역시설 공동이용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종시와 인접지역간 공동발전의 키워드는 '연계와 협력(Networking)을 통한 지역특성 강화와 기능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상생발전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구체화를 위해서는 실증적인 조사에 기초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연구에서 세종시가 인접도시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주변지역의 공동(空洞)화'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인지 또는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원고뒷면

---

## 제 4 장

---

### 대규모 신도시개발과 인접도시와의 인구이동에 관한 사례연구

---

제1절 수도권 사례

제2절 비수도권 사례

제3절 소결

---

간지뒀면

# 제4장 대규모 신도시개발과 인접도시와의 인구이동에 관한 사례연구

## 제1절 수도권 사례

### 1. 분당신도시와 성남시

#### 1) 분당신도시 건설의 개요<sup>4)</sup>

분당신도시 건설은 1989년 초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폭 등저지라는 단일 정책목표에 대응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이 계획은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개발의 시급성과 목표인구 약 40만명의 우리사회 최대의 신도시 개발사업이었다.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등 일원(21개동)
- 면적 및 사업비 : 19,639,008m<sup>2</sup>(5,940,800평), 4조 1,642억원
- 사업기간 : 1989년 8월 3일 ~ 1996년 12월 31일
- 수용인구·호수 : 390,320인, 97,580호



[그림 4-1] 분당신도시 위치도

4) 자료 : 분당신도시 개발사(한국토지공사, 1997)

#### 2) 분당구로의 인구이동

분당신도시가 개발된 이후 5년 후인 2001년과 15년 후인 2009년 분당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의 전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전국에서 분당구로의 전입자 총 95,289명중 55.1%인 52,532명이 경기도에서 전입하였으며, 다음은 서울시로 점유비중은 32.8%이다. 결국 전체 전입자의 87.9%가 인접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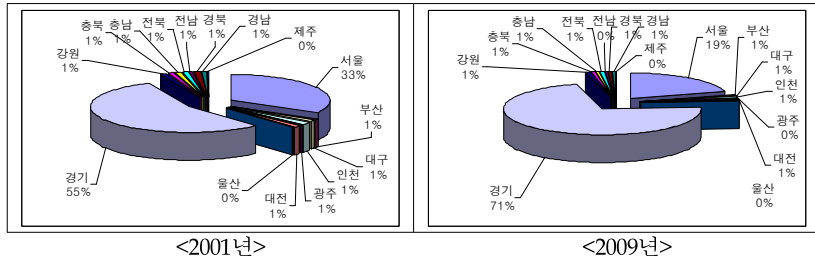
도시개발 완료 15년 후인, 2009년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전체 전입자 110,749명중 79,872명인 72.1%가 경기도에서 그리고 서울시 전입비율은 20.4%로 두 지역의 비율은 전체의 92.5%에 해당한다.

결국 신도시개발 이후 5년과 15년 시점에 신도시로 전입자의 약 90%는 인접한 시도에서 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전국으로부터 분당구로의 전입자 현황

전출지	2001년		2009년	
	인구이동(명)	점유비중(%)	인구이동(명)	점유비중(%)
전국	95,289	100.0	110,749	100.0
서울	31,222	32.8	22,563	20.4
부산	1,119	1.2	748	0.7
대구	734	0.8	633	0.6
인천	1,447	1.5	1,039	0.9
광주	560	0.6	439	0.4
대전	1,200	1.3	685	0.6
울산	225	0.2	185	0.2
경기	52,532	55.1	79,872	72.1
강원	1,007	1.1	764	0.7
충북	829	0.9	571	0.5
충남	989	1.0	934	0.8
전북	884	0.9	626	0.6
전남	597	0.6	419	0.4
경북	948	1.0	579	0.5
경남	814	0.9	546	0.5
제주	182	0.2	146	0.1

자료 : 통계청 자료



### 3) 성남시로의 인구이동

#### □ 전국에서 성남시로 전입현황

1995년 이후 전국에서 분당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성남시로의 인구이동을 살펴 보면, 인접한 경기도에서의 인구이동이 가장 높았다. 1995년 성남시로의 전입자중 경기도로부터 전입자가 전체의 48.23%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62.63%, 2005년 67.12% 그리고 2010년 경우 66.3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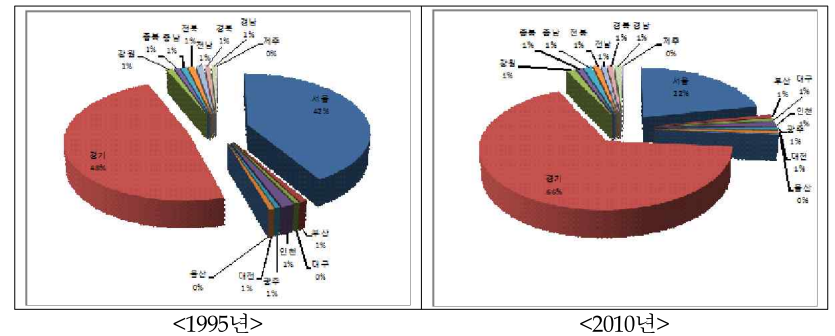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로부터 성남시로의 인구이동을 보면, 1995년 전체 전입자의 41.52%가 서울로부터 전입하였고, 2000년의 경우 23.01%, 2005년의 경우 19.32% 그리고 2010년의 경우 21.71%로 지속적인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신도시 개발 초기에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도 또는 인접한 서울로부터의 전입이 많이 이루어진 이후, 일정 규모의 인구이동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 전국으로부터 성남시로의 전입자 현황**

구분	전입자수(명)			
	'95년	'00년	'05년	'10년
전국	265,582 (100.0)	196,151 (100.0)	188,879 (100.0)	182,500 (100.0)
서울	110,278 (41.52)	45,127 (23.01)	36,486 (19.32)	39,618 (21.71)
부산	2,112 (0.80)	2,228 (1.14)	2,017 (1.07)	1,772 (0.97)

대구	1,313 (0.49)	1,562 (0.80)	1,459 (0.77)	1,215 (0.67)
인천	3,916 (1.47)	3,015 (1.54)	2,543 (1.35)	2,482 (1.36)
광주	1,353 (0.51)	1,397 (0.71)	1,451 (0.77)	1,090 (0.60)
대전	1,692 (0.64)	2,094 (1.07)	1,826 (0.97)	1,636 (0.90)
울산	-	496 (0.25)	480 (0.25)	523 (0.29)
경기	128,082 (48.23)	122,844 (62.63)	126,775 (67.12)	121,109 (66.36)
강원	2,623 (0.99)	2,777 (1.42)	2,520 (1.33)	2,424 (1.33)
충북	1,984 (0.75)	2,220 (1.13)	1,862 (0.99)	1,539 (0.84)
충남	2,330 (0.88)	2,648 (1.35)	2,592 (1.37)	2,225 (1.22)
전북	2,685 (1.01)	2,629 (1.34)	2,484 (1.32)	1,659 (0.91)
전남	2,772 (1.04)	2,924 (1.49)	2,187 (1.16)	1,406 (0.77)
경북	2,095 (0.79)	2,042 (1.04)	1,971 (1.04)	1,577 (0.86)
경남	2,004 (0.75)	1,647 (0.84)	1,732 (0.92)	1,757 (0.96)
제주	343 (0.13)	501 (0.26)	494 (0.26)	468 (0.26)



#### □ 경기도에서 성남시로의 전입자

성남시내 인구이동을 제외한 경기도 내 타시군에서 성남시로의 인구이동을 살펴 보면, 1995년 안양시로부터 인구이동이 10.83%, 용인시로부터의 인구이동은 전체의 10.79%, 수원시로부터의 인구이동은 10.62%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용인시와 광주시로부터의 인구이동 점유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용인시의 경우 2000년 21.21%, 2005년 29.08%, 2010년 33.42%로 나타났으며, 광주시의 경우 2000년 13.06%에서 2005년 16.67%, 2010년 14.19%로 나타났다.

<표 4-3> 경기도내 성남시로의 전입자 현황

구분	전입자수(명)			
	'95년	'00년	'05년	'10년
경기도	128,082	122,844	126,775	121,109
성남시	96,591	92,192	92,019	82,658
소계	31,491 (100.0)	30,652 (100.0)	34,756 (100.0)	38,451 (100.0)
수원시	<b>3,343 (10.62)</b>	2,768 (9.03)	2,444 (7.03)	3,048 (7.93)
의정부시	737 (2.34)	661 (2.16)	663 (1.91)	569 (1.48)
안양시	<b>3,412 (10.83)</b>	1,899 (6.20)	1,687 (4.85)	2,006 (5.22)
부천시	2,427 (7.71)	1,280 (4.18)	1,153 (3.32)	1,008 (2.62)
광명시	1,786 (5.67)	739 (2.41)	586 (1.69)	529 (1.38)
평택시	770 (2.45)	742 (2.42)	574 (1.65)	630 (1.64)
동두천시	99 (0.31)	112 (0.37)	143 (0.41)	147 (0.38)
안산시	1,638 (5.20)	1,127 (3.68)	1,159 (3.33)	1,082 (2.81)
고양시	1,603 (5.09)	2,279 (7.44)	2,110 (6.07)	1,945 (5.06)
과천시	1,993 (6.33)	585 (1.91)	484 (1.39)	405 (1.05)
구리시	596 (1.89)	449 (1.46)	409 (1.18)	423 (1.10)
남양주시	758 (2.41)	915 (2.99)	883 (2.54)	1,196 (3.11)
오산시	142 (0.45)	213 (0.69)	281 (0.81)	359 (0.93)
시흥시	360 (1.14)	643 (2.10)	609 (1.75)	575 (1.50)
군포시	1,027 (3.26)	902 (2.94)	801 (2.30)	755 (1.96)
의왕시	923 (2.93)	400 (1.30)	409 (1.18)	409 (1.06)
하남시	817 (2.59)	705 (2.30)	422 (1.21)	556 (1.45)
용인시	<b>3,398 (10.79)</b>	<b>6,502 (21.21)</b>	<b>10,106 (29.08)</b>	<b>12,849 (33.42)</b>
파주시	284 (0.90)	267 (0.87)	361 (1.04)	388 (1.01)
이천시	986 (3.13)	1,190 (3.88)	1,067 (3.07)	751 (1.95)
안성시	260 (0.83)	254 (0.83)	281 (0.81)	374 (0.97)
김포시	176 (0.56)	254 (0.83)	284 (0.82)	308 (0.80)
화성시	308 (0.98)	306 (1.00)	655 (1.88)	1,271 (3.31)
광주시	2,242 (7.12)	<b>4,002 (13.06)</b>	<b>5,793 (16.67)</b>	<b>5,458 (14.19)</b>
양주시	194 (0.62)	159 (0.52)	265 (0.76)	287 (0.75)
포천시	293 (0.93)	241 (0.79)	273 (0.79)	255 (0.66)
여주군	433 (1.37)	542 (1.77)	346 (1.00)	349 (0.91)
연천군	74 (0.23)	88 (0.29)	89 (0.26)	72 (0.19)
가평군	142 (0.45)	145 (0.47)	127 (0.37)	127 (0.33)
양평군	270 (0.86)	283 (0.92)	292 (0.84)	320 (0.83)

## 2. 일산신도시와 고양시

### 1) 일산신도시 건설개요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신도시와 유사하게 1980년대 말 불어 닥친 주택가격 폭등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발이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산신도시는 당시 50만 규모의 분당신도시에 비해 약간 규모가 작은 30만명을 목표인구로 개발되었다.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등 일원
- 면적 : 15,735,711㎡(4,760,056평)
- 사업기간 : 1990년 3월 31일 ~ 1995년 12월 31일
- 총사업비 : 2조 6,601억 5,900만원
- 수용인구·세대 : 276,000인, 69,000세대



[그림 4-2] 일산신도시 위치도

5) 자료 : 일산신도시 개발사(한국토지공사, 1997)

## 2) 일산구로의 인구이동

일산신도시가 개발된 이후 5년과 15년 후인 2001년, 2009년 경기도 고양시 분당구로의 전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전국에서 일산구로의 전입자 총 113,459명 중 58.2%인 66,063명이 경기도에서 전입하였으며, 다음은 서울시로부터 29.3%가 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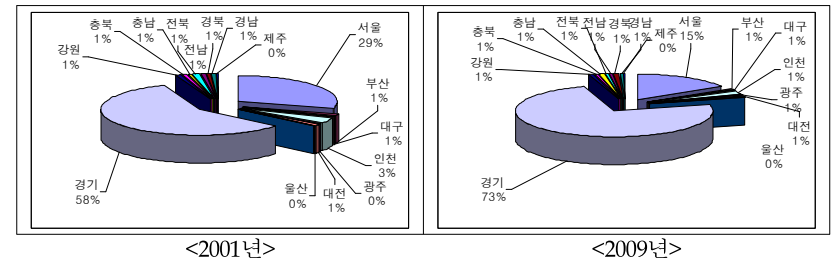
1995년 도시개발이 완료된 이후 약 15년이 경과한, 2009년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전체 134,267명의 74.3%가 경기도에서 그리고 서울시 전입비율은 16.1%로, 2001년에 비해 경기도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감소하였다.

결국 신도시개발 이후 5년과 15년 시점에 신도시로 전입하는 사람의 약 90%는 인접 지역에서 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전국으로부터 일산구로의 전입자 현황**

전출지	2001년		2009년	
	인구이동(명)	점유비중(%)	인구이동(명)	점유비중(%)
전국	113,459	100.0	134,267	100.0
서울	33,228	29.3	21,579	16.1
부산	1,316	1.2	1,050	0.8
대구	752	0.7	796	0.6
인천	3,704	3.3	2,733	2.0
광주	610	0.5	612	0.5
대전	893	0.8	793	0.6
울산	304	0.3	296	0.2
경기	66,063	58.2	99,816	74.3
강원	1,015	0.9	1,130	0.8
충북	691	0.6	648	0.5
충남	953	0.8	1,029	0.8
전북	1,093	1.0	857	0.6
전남	926	0.8	741	0.6
경북	779	0.7	966	0.7
경남	858	0.8	833	0.6
제주	274	0.2	388	0.3

자료 : 통계청 자료



## 3) 고양시로의 인구이동

### □ 전국에서 고양시로 전입자 현황

전국에서 경기도 고양시로의 인구이동을 보면, 경기도 자체의 인구이동이 1995년 37.1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55.06%, 2005년 60.55% 그리고 2010년의 61.6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고양시로의 인구이동을 보면, 1995년의 경우 전체인구이동의 55.58%에서 2000년 32.35%로 감소한 이후, 2005년 26.57%, 2010년 25.9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분당신도시가 개발된 성남시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일산신도시 초기인 1995년 서울시로부터 다수의 인구이동이 진행된 이후, 일정한 규모의 인구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 고양시로의 인구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5> 전국으로부터 고양시로의 전입자 현황**

구분	전입자수(명)			
	'95년	'00년	'05년	'10년
전국	238,319 (100.0)	191,686 (100.0)	197,638 (100.0)	174,090 (100.0)
서울	132,460 (55.58)	62,002 (32.35)	52,509 (26.57)	45,092 (2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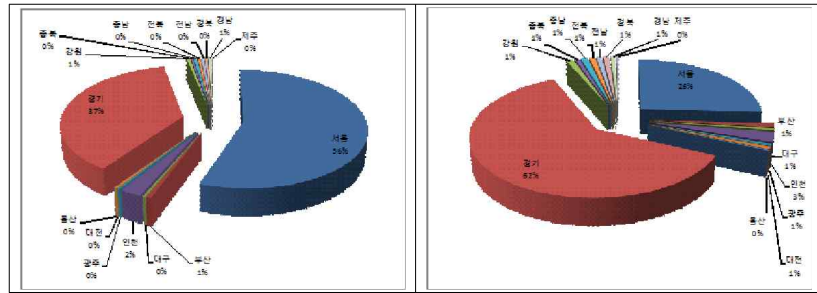


부산	1,442	(0.61)	2,257	(1.18)	2,020	(1.02)	1,834	(1.05)
대구	699	(0.29)	1,332	(0.69)	1,452	(0.73)	1,152	(0.66)
인천	5,859	(2.46)	4,822	(2.52)	4,948	(2.50)	4,655	(2.67)
광주	536	(0.22)	1,097	(0.57)	1,311	(0.66)	990	(0.57)
대전	911	(0.38)	1,535	(0.80)	1,499	(0.76)	1,313	(0.75)
울산	-	-	691	(0.36)	503	(0.25)	426	(0.24)
경기	88,552	(37.16)	105,538	(55.06)	119,674	(60.55)	107,300	(61.63)
강원	1,303	(0.55)	2,123	(1.11)	2,104	(1.06)	1,919	(1.10)
충북	817	(0.34)	1,182	(0.62)	1,282	(0.65)	1,193	(0.69)
충남	1,167	(0.49)	1,853	(0.97)	2,243	(1.13)	1,910	(1.10)
전북	1,028	(0.43)	1,849	(0.96)	2,106	(1.07)	1,437	(0.83)
전남	1,042	(0.44)	1,766	(0.92)	1,797	(0.91)	1,404	(0.81)
경북	1,011	(0.42)	1,637	(0.85)	2,040	(1.03)	1,595	(0.92)
경남	1,239	(0.52)	1,482	(0.77)	1,570	(0.79)	1,366	(0.78)
제주	253	(0.11)	520	(0.27)	580	(0.29)	504	(0.29)

이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6> 경기도로부터 고양시로의 전입자 현황

구분	전입자수(명)							
	'95년		'00년		'05년		'10년	
경기도	88,552	-	105,538	-	119,674	-	107,300	-
고양시	56,058	-	80,705	-	88,758	-	77,643	-
소계	32,494	(100.0)	24,833	(100.0)	30,916	(100.0)	29,657	(100.0)
수원시	1,098	(3.38)	1,303	(5.25)	1,196	(3.87)	1,395	(4.70)
성남시	2,840	(8.74)	2,375	(9.56)	1,800	(5.82)	1,675	(5.65)
의정부시	1,341	(4.13)	1,353	(5.45)	1,420	(4.59)	1,311	(4.42)
안양시	3,169	(9.75)	1,506	(6.06)	1,381	(4.47)	1,012	(3.41)
부천시	<b>5,745</b>	<b>(17.68)</b>	<b>2,713</b>	<b>(10.92)</b>	2,552	(8.25)	2,397	(8.08)
광명시	<b>4,770</b>	<b>(14.68)</b>	1,444	(5.81)	1,136	(3.67)	660	(2.23)
평택시	277	(0.85)	415	(1.67)	402	(1.30)	389	(1.31)
동두천시	187	(0.58)	155	(0.62)	339	(1.10)	237	(0.80)
안산시	1,309	(4.03)	943	(3.80)	960	(3.11)	916	(3.09)
과천시	1,301	(4.00)	286	(1.15)	290	(0.94)	170	(0.57)
구리시	397	(1.22)	397	(1.60)	432	(1.40)	385	(1.30)
남양주시	613	(1.89)	762	(3.07)	846	(2.74)	1,142	(3.85)
오산시	61	(0.19)	72	(0.29)	121	(0.39)	167	(0.56)
시흥시	487	(1.50)	749	(3.02)	903	(2.92)	670	(2.26)
군포시	1,026	(3.16)	788	(3.17)	628	(2.03)	519	(1.75)
의왕시	580	(1.78)	253	(1.02)	273	(0.88)	208	(0.70)
하남시	334	(1.03)	223	(0.90)	199	(0.64)	257	(0.87)
용인시	387	(1.19)	908	(3.66)	1,543	(4.99)	1,675	(5.65)
파주시	<b>4,455</b>	<b>(13.71)</b>	<b>4,882</b>	<b>(19.66)</b>	<b>10,098</b>	<b>(32.66)</b>	<b>9,868</b>	<b>(33.27)</b>
이천시	161	(0.50)	259	(1.04)	234	(0.76)	182	(0.61)
안성시	89	(0.27)	141	(0.57)	168	(0.54)	183	(0.62)
김포시	379	(1.17)	954	(3.84)	1,372	(4.44)	1,383	(4.66)
화성시	131	(0.40)	151	(0.61)	400	(1.29)	682	(2.30)
광주시	126	(0.39)	272	(1.10)	421	(1.36)	385	(1.30)
양주시	403	(1.24)	514	(2.07)	878	(2.84)	887	(2.99)
포천시	332	(1.02)	391	(1.57)	368	(1.19)	370	(1.25)
여주군	85	(0.26)	112	(0.45)	109	(0.35)	92	(0.31)
연천군	180	(0.55)	188	(0.76)	144	(0.47)	164	(0.55)
가평군	82	(0.25)	163	(0.66)	127	(0.41)	116	(0.39)
양평군	149	(0.46)	161	(0.65)	176	(0.57)	160	(0.54)



□ 경기도에서 고양시로의 전입자

경기도로부터 고양시로의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에는 부천시(17.68%)와 광명시(14.68%), 파주시(13.71%)로부터의 전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 들어서면서 파주시(19.66%)의 점유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의 경우 32.66% 그리고 2010년의 경우 33.27%를 점하게 된다.

즉 일산신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경과한 이후에는 인접한 파주시로부터의 인구

## 제2절 비수도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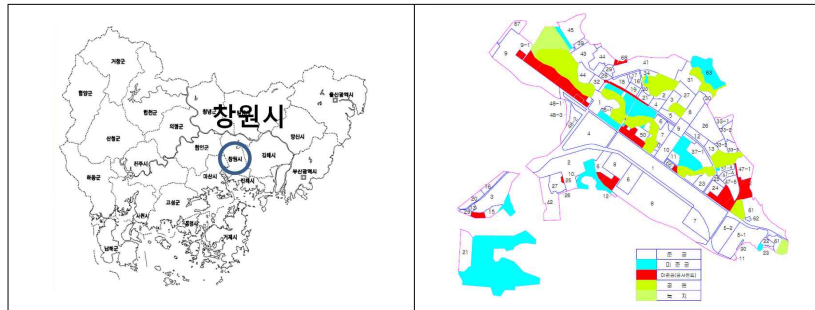
### 1. 창원시와 마산시

#### 1) 창원신도시 건설개요

창원시는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창원신도시 계획의 특징적인 것은 박정희대통령 시절 도청이전을 염두에 두고 배후도시 중심에 6만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함께 추진하였으며, 지리적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역으로 10차선 도로를 가운데 두고 공단과 배후도시를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1974년 4월 1일 경남 마산시 두대동 등 43.352km<sup>2</sup>를 산업기지가개발구역으로 고시하였고, 1991년에 53.120km<sup>2</sup>를 변경·고시하였다. 계획인구는 약 30만명이다.

창원신도시는 총면적 53,120천m<sup>2</sup> 중 공업지역 22,600천m<sup>2</sup>, 준공업지역 1,171천m<sup>2</sup>, 주거지역 14,034천m<sup>2</sup>, 상업지역 2,880천m<sup>2</sup>, 녹지지역 및 기타 12,435천m<sup>2</sup>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이용은 가능한 한 super-block으로 분할하되, 공해의 피해를 줄이고 공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풍향을 고려한 배치를 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4-3] 창원 신도시 위치도 및 조성 현황도

6) 이우배, 2003, 창원 신도시 사례로 본 남악신도시개발의 현안과제

#### 2) 창원신도시로의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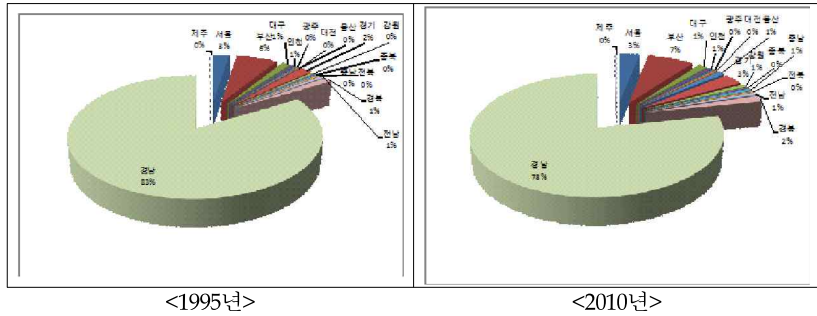
##### □ 전국차원에서 창원신도시로의 전입자

전국에서 창원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경남에서의 인구이동(전입자)이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83.47%에서 2010년 77.92%로 약간 하락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그 점유비중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한편 부산으로부터의 인구이동비중은 1995년 6.31%, 2000년 6.60%, 2005년 6.74%, 2010년 7.08%로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7> 전국으로부터 창원시로의 전입자 현황

구분	전입자수(명)			
	'95년	'00년	'05년	'10년
전국	113,026 (100.0)	87,567 (100.0)	78,147 (100.0)	160,657 (100.0)
서울	2,852 (2.52)	2,021 (2.31)	2,099 (2.69)	4,972 (3.09)
부산	<b>7,127 (6.31)</b>	<b>5,781 (6.60)</b>	<b>5,269 (6.74)</b>	<b>11,367 (7.08)</b>
대구	1,490 (1.32)	1,149 (1.31)	1,350 (1.73)	2,246 (1.40)
인천	660 (0.58)	467 (0.53)	393 (0.50)	1,089 (0.68)
광주	294 (0.26)	217 (0.25)	184 (0.24)	402 (0.25)
대전	346 (0.31)	349 (0.40)	386 (0.49)	762 (0.47)
울산	-	912 (1.04)	993 (1.27)	1,729 (1.08)
경기	2,101 (1.86)	1,866 (2.13)	2,000 (2.56)	4,926 (3.07)
강원	461 (0.41)	375 (0.43)	395 (0.51)	1,379 (0.86)
충북	292 (0.26)	303 (0.35)	313 (0.40)	581 (0.36)
충남	356 (0.31)	396 (0.45)	443 (0.57)	1,043 (0.65)
전북	391 (0.35)	344 (0.39)	375 (0.48)	545 (0.34)
전남	684 (0.61)	714 (0.82)	519 (0.66)	1,208 (0.75)
경북	1,463 (1.29)	1,442 (1.65)	1,477 (1.89)	2,808 (1.75)
경남	<b>94,343 (83.47)</b>	<b>71,039 (81.13)</b>	<b>61,750 (79.02)</b>	<b>125,180 (77.92)</b>
제주	166 (0.15)	192 (0.22)	201 (0.26)	420 (0.26)



3) 마산시로의 인구이동

□ 전국차원에서 마산시로의 전입자

창원신도시의 모도시 또는 배후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마산시로의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경상남도에서의 전입이 전체 전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입 인구이동의 대부분이 경상남도로부터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95년의 경우 85.93%, 2000년의 경우 84.33%, 2005년의 경우 83.67% 그리고 2009년의 경우 81.56%, 2010년 6월까지의 통계에서는 84.43%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이외의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시가 4~5% 정도의 점유비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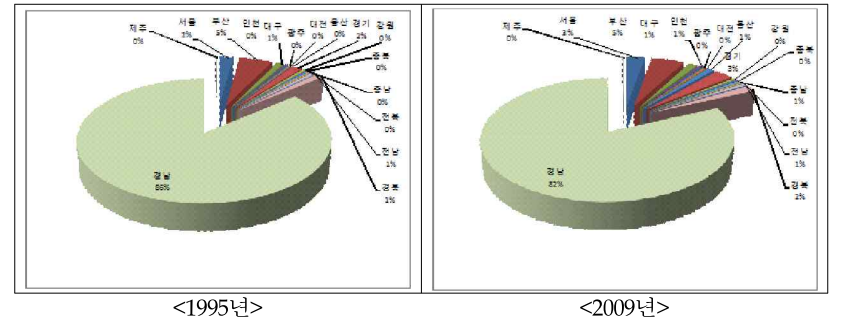
<표 4-8> 전국으로부터 마산시로의 전입자 현황

구분	전입자수(명)				
	'95년	'00년	'05년	'09년	'10년 06월
전국	74,483 (100.00)	67,994 (100.00)	63,737 (100.00)	51,258 (100.00)	32,892 (100.00)
서울	1,596 (2.14)	1,533 (2.25)	1,590 (2.49)	1,427 (2.78)	871 (2.65)

부산	3,763 (5.05)	3,182 (4.68)	2,986 (4.68)	2,585 (5.04)	1,333 (4.05)
대구	818 (1.10)	794 (1.17)	877 (1.38)	692 (1.35)	364 (1.11)
인천	313 (0.42)	266 (0.39)	281 (0.44)	290 (0.57)	132 (0.40)
광주	147 (0.20)	196 (0.29)	119 (0.19)	114 (0.22)	57 (0.17)
대전	207 (0.28)	200 (0.29)	213 (0.33)	194 (0.38)	118 (0.36)
울산	-	659 (0.97)	716 (1.12)	550 (1.07)	326 (0.99)
경기	1,126 (1.51)	1,318 (1.94)	1,320 (2.07)	1,444 (2.82)	774 (2.35)
강원	342 (0.46)	263 (0.39)	224 (0.35)	239 (0.47)	119 (0.36)
충북	189 (0.25)	201 (0.30)	151 (0.24)	176 (0.34)	79 (0.24)
충남	231 (0.31)	260 (0.38)	286 (0.45)	277 (0.54)	135 (0.41)
전북	203 (0.27)	196 (0.29)	184 (0.29)	158 (0.31)	73 (0.22)
전남	499 (0.67)	426 (0.63)	317 (0.50)	339 (0.66)	181 (0.55)
경북	878 (1.18)	977 (1.44)	958 (1.50)	845 (1.65)	484 (1.47)
경남	64,000 (85.93)	57,337 (84.33)	53,327 (83.67)	41,804 (81.56)	27,772 (84.43)
제주	171 (0.23)	186 (0.27)	188 (0.29)	124 (0.24)	74 (0.22)

주1 :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

주2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2010년 07월 창원시로 통합됨



□ 경상남도지역에서 마산시로의 전입자

경상남도에서 마산시로의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창원시로부터의 전입이 전체 전입자의 4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경우 마산시 전체 전입자의 50.05%, 2000년의 경우 50.66%, 2009년의 경우 41.8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인접한 함안군으로부터의 전입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9> 경상남도로부터 마산시로의 전입자 현황

구 분	전입자수(명)				
	'95년	'00년	'05년	'09년	'10년 06월
경상남도	64,000	57,337	53,327	41,804	27,772
마산시	40,924	35,515	32,730	26,026	17,033
소 계	23,076 (100.0)	21,822 (100.0)	20,597 (100.0)	15,778 (100.0)	10,739 (100.0)
창원시	11,549 (50.05)	11,056 (50.66)	9,452 (45.89)	6,603 (41.85)	5,001 (46.57)
울산시	589 (2.55)	-	-	-	-
진주시	1,181 (5.12)	1,158 (5.31)	1,027 (4.99)	786 (4.98)	434 (4.04)
진해시	1,052 (4.56)	1,062 (4.87)	1,401 (6.80)	912 (5.78)	564 (5.25)
통영시	626 (2.71)	653 (2.99)	485 (2.35)	432 (2.74)	229 (2.13)
사천시	320 (1.39)	338 (1.55)	358 (1.74)	296 (1.88)	135 (1.26)
김해시	849 (3.68)	1,195 (5.48)	1,521 (7.38)	1,317 (8.35)	1,012 (9.42)
밀양시	379 (1.64)	402 (1.84)	284 (1.38)	224 (1.42)	133 (1.24)
거제시	555 (2.41)	621 (2.85)	490 (2.38)	533 (3.38)	388 (3.61)
양산시	195 (0.85)	202 (0.93)	214 (1.04)	197 (1.25)	170 (1.58)
의령군	677 (2.93)	550 (2.52)	713 (3.46)	540 (3.42)	290 (2.70)
함안군	2,349 (10.18)	2,132 (9.77)	2,460 (11.94)	2,016 (12.78)	1,348 (12.55)
창녕군	826 (3.58)	677 (3.10)	676 (3.28)	489 (3.10)	269 (2.50)
고성군	802 (3.48)	753 (3.45)	569 (2.76)	544 (3.45)	269 (2.50)
남해군	195 (0.85)	179 (0.82)	150 (0.73)	160 (1.01)	108 (1.01)
하동군	210 (0.91)	263 (1.21)	172 (0.84)	216 (1.37)	118 (1.10)
산청군	201 (0.87)	155 (0.71)	158 (0.77)	86 (0.55)	54 (0.50)
함양군	157 (0.68)	119 (0.55)	86 (0.42)	67 (0.42)	34 (0.32)
거창군	122 (0.53)	113 (0.52)	72 (0.35)	93 (0.59)	51 (0.47)
합천군	242 (1.05)	194 (0.89)	309 (1.50)	267 (1.69)	132 (1.23)

주1 :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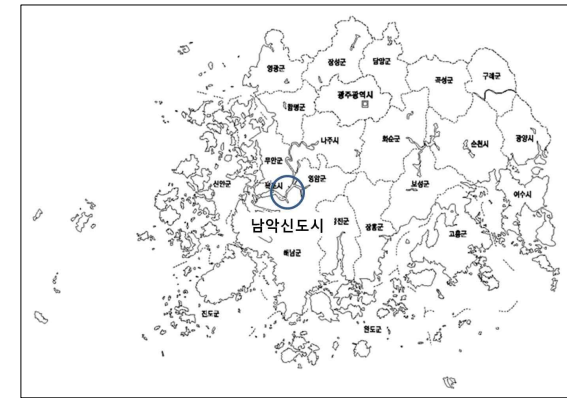
주2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2010년 07월 창원시로 통합됨

## 2. 남악신도시와 목포시

### 1) 남악신도시 건설개요

남악 신도시는 20년간(2000~2019)에 걸쳐 150,000인(약 43,000세대)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광역행정의 중추도시, 목포 연계 도시권 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식산업기반과 역사·문화의 전승도시, 단계적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신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남악신도시 개발안의 특징은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신도시를 상징하는 역할로 행정·문화·연구기능, 전남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로 정보·경제·지식교류기능, 50만 도시권의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로 도시서비스·편익·복지기능을 설정하여 담아냈다.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 및 무안군 일원
- 면적 : 8,913,150㎡(2,696,228평)
- 사업기간 : 2000년 ~ 2019년
- 수용인구·세대 : 150,000인, 약 43,000세대



[그림 4-4] 남악 신도시 위치도

7) 자료 : 도청이전백서(중)(전라남도, 2006)

## 2) 목포시의 인구이동

### □ 전국차원에서 목포시로의 전입자<sup>8)</sup>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남악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목포로의 인구이동(전입자)을 살펴보면, 전체 전입자의 70% 이상이 전라남도에서 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로의 전입비율은 2000년의 경우 81.10%, 2005년의 경우 76.18% 그리고 2010년의 경우 76.9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공간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으나, 광주광역시로부터의 전입비율은 2000년 4.95%, 2005년 7.40% 그리고 2010년의 경우 다소 감소한 5.23%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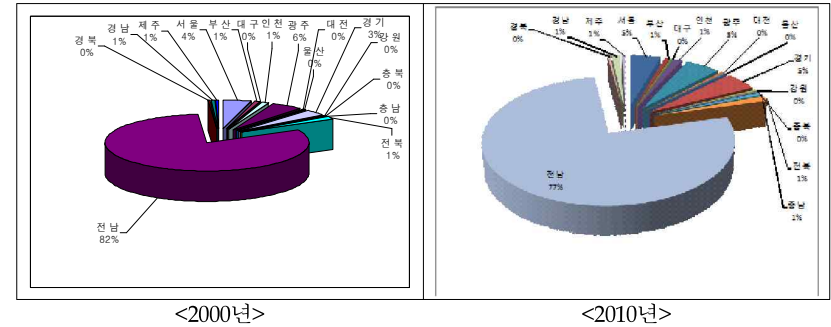
**<표 4-10> 전국으로부터 목포시로의 전입자 현황**

구분	전입자수(명)					
	'00년		'05년		'10년	
전국	54,898	(100.00)	52,210	(100.00)	45,587	(100.00)
서울	2,435	(4.44)	2,316	(4.44)	2,138	(4.69)
부산	398	(0.72)	356	(0.68)	344	(0.75)
대구	97	(0.18)	105	(0.20)	101	(0.22)
인천	568	(1.03)	587	(1.12)	607	(1.33)
광주	2,716	(4.95)	3,864	(7.40)	2,384	(5.23)
대전	201	(0.37)	269	(0.52)	196	(0.43)
울산	165	(0.30)	137	(0.26)	112	(0.25)
경기	1,765	(3.22)	2,403	(4.60)	2,242	(4.92)
강원	162	(0.30)	182	(0.35)	205	(0.45)
충북	154	(0.28)	187	(0.36)	162	(0.36)
충남	245	(0.45)	445	(0.85)	327	(0.72)
전북	655	(1.19)	797	(1.53)	663	(1.45)
전남	44,520	(81.10)	39,776	(76.18)	35,073	(76.94)
경북	152	(0.28)	125	(0.24)	191	(0.42)
경남	358	(0.65)	362	(0.69)	600	(1.32)
제주	307	(0.56)	299	(0.57)	242	(0.53)

주1 :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

주2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2010년 07월 창원시로 통합됨

8) 남악신도시의 경우, 목포시와 무안군에 걸쳐 건설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대전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목포시를 대상으로 인구이동을 살펴보았다.



### □ 전라남도지역에서 목포시로의 전입자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로의 전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전입자의 약 50% 정도가 무안군에서 이동하였는데, 2000년의 경우 52.05%, 2005년의 경우 54.60% 그리고 2010년의 경우 47.50%가 무안군으로부터 전입하였다. 또한 무안군 외 지역으로는 2010년 기준 영암군의 전입비율이 14.72%, 신안군이 8.11%를 점유하고 있으며, 해남군이 5.0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1>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로의 전입자 현황**

구분	전입자수(명)					
	'00년		'05년		'10년	
전남	4,847	-	4,258	-	8,153	-
목포시	2,478	-	2,194	-	4,810	-
소계	2,369	(100.0)	2,064	(100.0)	3,343	(100.0)
여수시	47	(1.98)	42	(2.03)	53	(1.59)
순천시	44	(1.86)	45	(2.18)	78	(2.33)
나주시	109	(4.60)	104	(5.04)	137	(4.10)
여천시	-	-	-	-	-	-
광양시	22	(0.93)	16	(0.78)	42	(1.26)
담양군	24	(1.01)	18	(0.87)	17	(0.51)

곡성군	17	(0.72)	6	(0.29)	16	(0.48)
구례군	13	(0.55)	7	(0.34)	2	(0.06)
여천군	-	-	-	-	-	-
고흥군	20	(0.84)	24	(1.16)	17	(0.51)
보성군	14	(0.59)	18	(0.87)	5	(0.45)
화순군	38	(1.60)	51	(2.47)	42	(1.26)
장흥군	35	(1.48)	15	(0.73)	37	(1.11)
강진군	40	(1.69)	15	(0.73)	62	(1.85)
해남군	129	(5.45)	66	(3.20)	170	(5.09)
영암군	120	(5.07)	117	(5.67)	492	(14.72)
무안군	1,233	(52.05)	1,127	(54.60)	1,588	(47.50)
함평군	185	(7.81)	162	(7.85)	123	(3.68)
영광군	66	(2.79)	25	(1.21)	50	(1.50)
장성군	34	(1.44)	35	(1.70)	22	(0.66)
완도군	36	(1.52)	20	(0.97)	45	(1.35)
진도군	29	(1.22)	18	(0.87)	64	(1.91)
신안군	114	(4.81)	133	(6.44)	271	(8.11)

주1 : 1998년 4월 통합여수시 개칭(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 제3절 소결

본 4장에서는 행정도시가 건설될 경우, 대전시에서 행정도시로 인구이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건설된 대규모 신도시를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수도권 신도시로는 분당과 일산 그리고 비수도권 신도시로는 창원과 남악으로 선정하였다.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신도시 또는 인접 대도시로의 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분당	일산	창원	남악	
신 도 시	-	-	-	-	-	
	1995년	제1전입지역(%)	-	-	경남(83.5%)	-
		제2전입지역(%)	-	-	부산( 6.3%)	-
	2000년/ 2001년	제1전입지역(%)	경기(55.1%)	경기(58.2%)	경남(81.1%)	-
		제2전입지역(%)	서울(32.8%)	서울(29.3%)	부산( 6.6%)	-
	2005년	제1전입지역(%)	-	-	경남(79.0%)	-
		제2전입지역(%)	-	-	부산( 6.7%)	-
	2009년/ 2010년	제1전입지역(%)	경기(72.1%)	경기(74.3%)	경남(77.9%)	-
		제2전입지역(%)	서울(20.4%)	서울(16.1%)	부산( 7.1%)	-
	인 접 대 도 시	-	성남	고양	마산	목포
1995년		제1전입지역(%)	경기(48.2%)	서울(55.6%)	경남(85.9%)	-
		제2전입지역(%)	서울(41.5%)	경기(37.2%)	부산( 5.1%)	-
2000년		제1전입지역(%)	경기(62.6%)	경기(55.1%)	경남(84.3%)	전남(81.1%)
		제2전입지역(%)	서울(23.05)	서울(32.4%)	부산( 4.7%)	광주( 5.0%)
2005년		제1전입지역(%)	경기(67.1%)	경기(60.1%)	경남(83.7%)	전남(76.2%)
		제2전입지역(%)	서울(19.3%)	서울(26.6%)	부산( 4.7%)	광주( 7.4%)
2010년		제1전입지역(%)	경기(66.4%)	경기(61.6%)	경남(84.4%)	전남(76.9%)
		제2전입지역(%)	서울(21.7%)	서울(25.9%)	부산( 4.1%)	광주( 5.2%)

주 : 분당과 일산은 2001년과 2009년, 창원은 2000년과 2010년 자료임

분석결과, 신도시가 건설된 5년 이후 신도시로의 전입자 상당수가 신도시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 대도시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당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에서의 전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 신도시의 경우도 경기도와 서울시에서의 전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경기도의 전입자가 2001년에 비해 2009년 증가하고, 반면 서울의 경우 전입자가 감소하였다.

지방 신도시의 사례에서도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원신도시의 경우, 경상남도 와 부산시에서의 전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도시와 인접한 대도시(모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수도권 내 성남시와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로부터의 전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내 마산시의 경우 경남과 부산시 그리고 목포시의 경우 전남과 광주에서의 전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향후 행정도시가 건설될 경우, 충청권과 대전에서 행정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대전시의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 보다는 충청권에서의 전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

## 원고뒷면

---

## 제 5 장

---

### 행정도시 건설과 대전시민 인구이동 예측

---

제1절 대전시민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제2절 행정도시 첫마을 건설 및 분양 현황 검토

제3절 소결

---

간지뒀면



## 제5장 행정도시 건설과 대전시민 인구이동 예측

### 제1절 대전시민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 1. 조사의 배경 및 방법

##### 1) 조사의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도시의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 영향 중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행정도시가 건설될 경우, 행정도시로 이사(주거이동)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의 경우, 대부분 기존사례나 문헌조사 등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을 파악하고는 있으나, 실증적인 조사나 분석이 미흡하다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 2) 조사의 개요

본 설문조사는 대전시민의 행정도시로 이주의향을 파악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으며,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 동안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은 조사의 객관성·대표성을 높이고자,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였으며, 조사자는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사전교육된 숙달된 조사요원에 의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조사매수는 821매이다. 분석은 SPSS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 3) 주요 설문내용 및 설문대상자 일반적 특성

##### □ 주요 설문내용

행정도시가 대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행정도시로 이사할 의향 있는지 여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도 및 도시의 매력도
  -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도,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여부, 행정도시의 보다 성공적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 행정도시에 대한 매력도
-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
  -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문, 행정도시와 대전시의 삶의 질
- 현 거주만족도와 행정도시로의 이주 가능성
  - 현 거주지의 주변환경 만족도, 행정도시로의 이주의향, 이주이유, 이주시기, 이주하지 않는 이유, 직장이동의 가능성, 직장이동 시 통근통학의 의사
- 행정도시와 대전시 시설이용 의향
  - 시설수준 및 이용지역 예측

##### □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성향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개인적 성향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자가 53.0%로 남성보다 6% 높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5.9%, 30대가 21.2%, 50대가 21.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지는 서구가 33.0%로 가장 많으며, 유성구가 18.3%, 중구가 17.4% 등이다.

주택소유자는 전체의 76.4%에 해당하며, 학력측면에서 중학교 졸업자는 6.0%, 고등학교 졸업자가 38.4% 그리고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는 55.7%이다.

월수입에서 보면,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대상자는 17.9%, 200만원에서 400만

원의 월수입자는 50.9% 그리고 400만원 초과자는 31.2%이다.

자산측면에서는 1억원 미만이 전체의 33.9%이며, 1억~2억 미만은 30.9% 그리고 2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응답자는 전체의 35.2%이다.

직업으로는 자영업이 23.5%로 가장 많고, 일반회사원이 21.4%, 전업주부가 15.5%, 전문직이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설문응답자 구성							
	성별	남자		여자		합계		
	386 (47.0)		435 (53.0)		821 (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156 (19.0)	174 (21.2)	213 (25.9)	173 (21.1)	105 (12.8)	821 (100)		
거주지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합계		
	123 (15.0)	134 (16.3)	271 (33.0)	150 (18.3)	143 (17.4)	821 (100)		
주택 소유	자가		임대		합계			
	627 (76.4)		194 (23.6)		821 (100)			
학력	중학교		고등학교		대졸이상		합계	
	49 (6.0)		315 (38.4)		457 (55.7)		821 (100)	
월수입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합계	
	147 (17.9)		418 (50.9)		256 (31.2)		821 (100)	
자산	1억 미만		1억 ~ 2억 미만		2억 이상		합계	
	278 (33.9)		254 (30.9)		289 (35.2)		821 (100)	
직업	일반회사원	전업주부	학생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	기타	합계
	176 (21.4)	127 (15.5)	48 (5.8)	66 (8.0)	48 (5.8)	193 (23.5)	163 (19.9)	821 (100)

## 2.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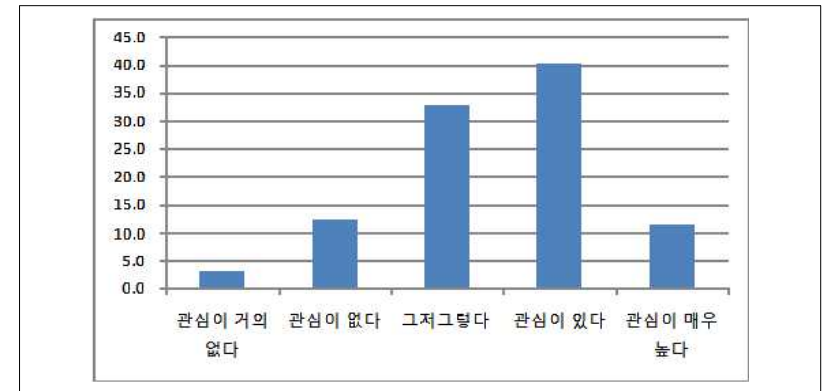
### 1)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도 및 도시의 매력도

#### □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도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관심이 거의 없다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15.6%로 나타났으며, 관심이 있다와 관심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전체의 51.6%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도 32.8%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관심이 거의 없다	관심이 없다	그저 그렇다	관심이 있다	관심이 매우 높다	합계
빈도	26	102	269	331	93	821
(%)	(3.2)	(12.4)	(32.8)	(40.3)	(1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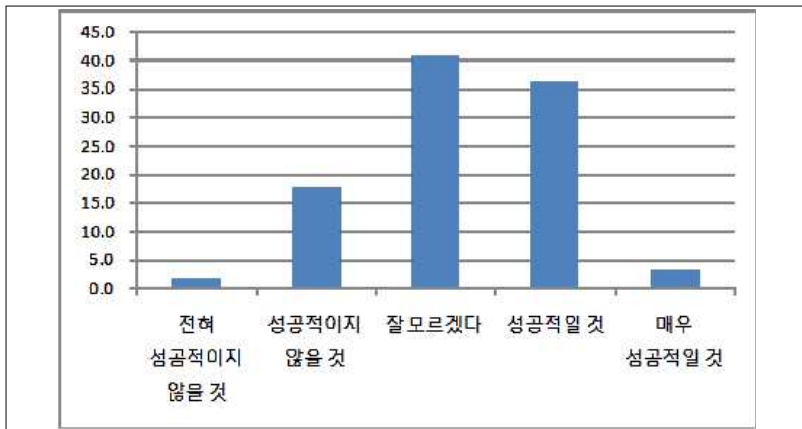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도>

□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여부

행정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전혀 성공적이지 않을 것과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전체의 19.5%로 나타났으며, 성공적일 것과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전체의 39.6%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 분	전혀 성공적이지 않을 것	성공적이지 않을 것	잘 모르겠다	성공적일 것	매우 성공적일 것	합계
빈도	15	145	335	298	27	820
(%)	(1.8)	(17.7)	(40.9)	(36.3)	(3.3)	(100.0)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여부>

□ 행정도시의 보다 성공적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

행정도시가 향후 보다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7.9%는 정부의 추진의지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

으로는 경제적 지원으로 21.0% 그리고 계획의 보완(11.9%)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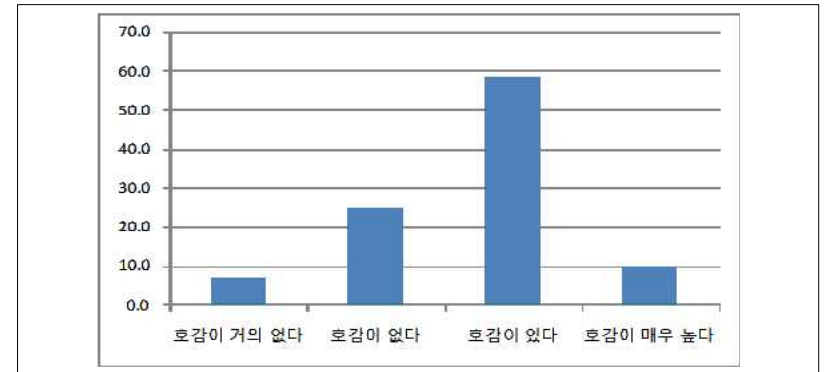
즉 설문대상자는 행정도시 건설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정부의 추진의지	경제적지원 (건설비용)	계획의 보완	해당지자체의 의지	주민의 의지	합계
빈도	475	172	98	43	33	821
(%)	(57.9)	(21.0)	(11.9)	(5.2)	(4.0)	(100.0)

□ 행정도시에 대한 매력도

행정도시에 대한 매력도를 조사한 결과, 호감이 거의 없다와 호감이 없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31.8%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호감이 있다라는 응답이 68.2%로 약 2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 분	호감이 거의 없다	호감이 없다	호감이 있다	호감이 매우 높다	합계
빈도	56	205	478	82	821
(%)	(6.8)	(25.0)	(58.2)	(10.0)	(100.0)



<행정도시에 대한 매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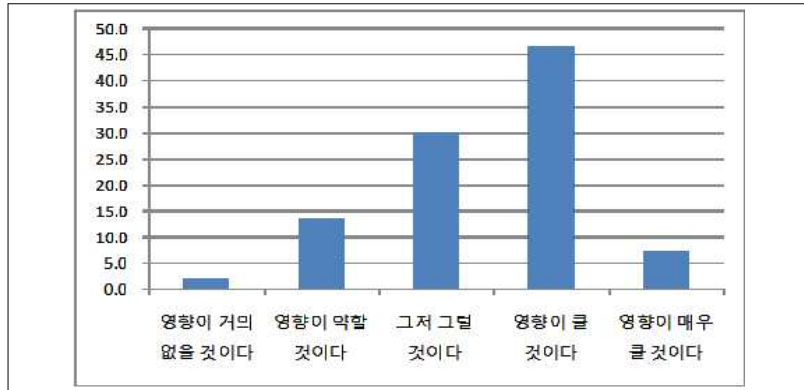
2)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

□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영향이 없다거나 약할 것이라는 응답이 15.9%로 나타났고, 영향이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3.9%로 그리고 그저 그럴 것이라는 응답이 30.2%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설문대상자의 대부분은 행정도시가 어떠한 형태로든 대전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영향이 약할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영향이 클 것이다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합계
빈도	19	112	248	383	59	821
(%)	(2.3)	(13.6)	(30.2)	(46.7)	(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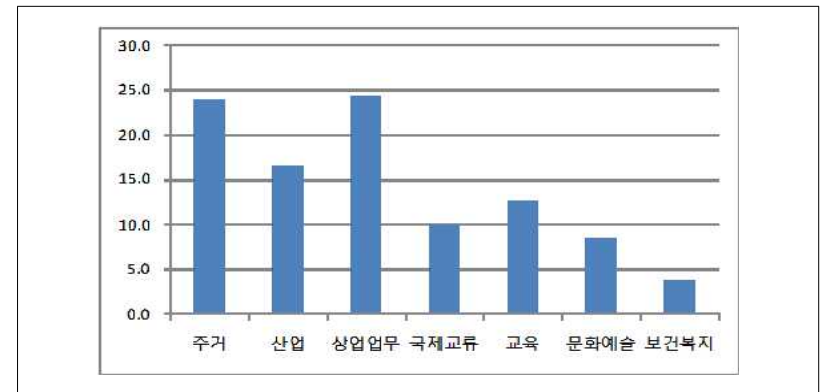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문

행정도시가 대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분야를 조사한 결과, 상업·업무부문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주거부문으로 24.0%로 나타났다. 산업부문은 16.6%로 다음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구 분	주거 부문	산업 부문	상업 업무	국제 교류	교육	문화 예술	보건 복지	합계
빈도	197	136	200	82	104	71	31	821
(%)	(24.0)	(16.6)	(24.4)	(10.0)	(12.7)	(8.6)	(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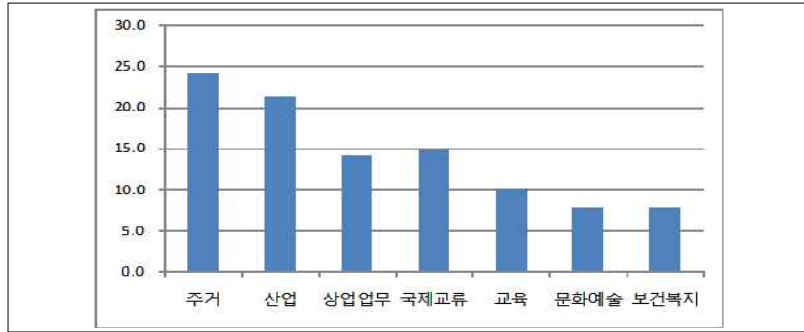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문

행정도시가 대전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분야를 조사한 결과, 주거부문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산업부문으로 21.2%로 나타났다. 국제교류부문(14.7%)과 상업업무부문(14.1%)이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구 분	주거 부분	산업 부분	상업 업무	국제 교류	교육	문화 예술	보건 복지	합계
빈도	198	174	116	121	83	65	64	821
(%)	(24.1)	(21.2)	(14.1)	(14.7)	(10.1)	(7.9)	(7.8)	(100.0)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영향>

### 3) 현 주거만족도와 행정도시로의 이주 가능성

#### □ 현 거주지의 주변환경 만족도

설문대상자의 현 거주지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6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57.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50.5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체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51.9점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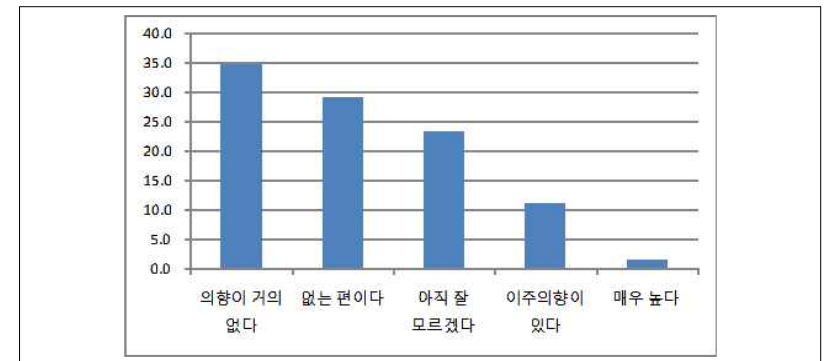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평균 점수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상업	6.5	3.2	7.9	7.4	20.3	17.2	15.6	13.6	6.0	2.3	56.6
교통	7.3	5.4	7.3	10.8	17.8	14.6	14.5	13.2	6.1	3.0	55.2
문화	8.4	5.6	10.8	14.3	19.1	14.9	12.1	8.8	4.6	1.5	50.5

교육	3.7	4.3	6.3	9.7	22.2	17.1	17.4	12.3	5.0	2.1	56.9
주거	2.8	2.1	5.5	7.2	21.2	16.9	18.9	17.1	6.5	2.1	60.6
녹지	4.3	3.8	6.3	9.4	17.2	20.2	16.7	14.5	5.7	1.9	57.9
체육	6.3	6.3	7.9	12.9	21.9	16.7	14.5	8.3	3.7	1.5	51.9
보건	2.9	3.9	6.1	10.6	20.6	20.8	17.2	10.8	5.0	2.1	57.2
종합	2.4	3.0	4.8	6.5	21.2	22.4	20.7	13.0	4.8	1.2	59.3

#### □ 행정도시로의 이주의향

향후 행정도시로의 이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조사자의 63.9%는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은 12.7%로 나타났다. 한편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3.4%로 나타났다.

구 분	의향이 거의 없다	없는 편이다	아직 잘 모르겠다	이주의향 이 있다	매우 높다	합계
빈도	286	239	192	91	13	821
(%)	(34.8)	(29.1)	(23.4)	(11.1)	(1.6)	(100.0)



<행정도시로의 이주의향>

행정도시로의 이주의향을 3가지, 즉 '이주의향이 없다(거의 없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주의향이 있다(매우 높다)'로 구분하고, 이들 3가지 유형별 응답자의 개인적 성향을 살펴 본 결과,

성별측면에서는 남자의 이주의향 성향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측면에서는 이주의향이 있다라는 유형은 50대가 1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0대가 14.6%이다.

거주지측면에서 보면, 이주의향이 있다라는 유형은 유성구가 20.7%, 서구가 13.7%로 다른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주택소유측면에서는 자가 보유자의 이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측면에서 보면, 이주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유형은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경우 15.3%, 고등학교 졸업자는 9.5%, 중학교 졸업자 이하는 8.2%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측면에서 보면, 월수입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집단의 14.5%, 반면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 집단의 7.5%가 이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월수입이 높은 집단에서의 이주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측면에서는 2억이상 보유자의 17.0%, 1억미만 보유자의 9.0%가 이주의사를 밝혔고, 직업측면에서는 공무원(16.7%), 전문직(15.2%), 전업주부(15.0%)의 이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성향별 이주의향분석 :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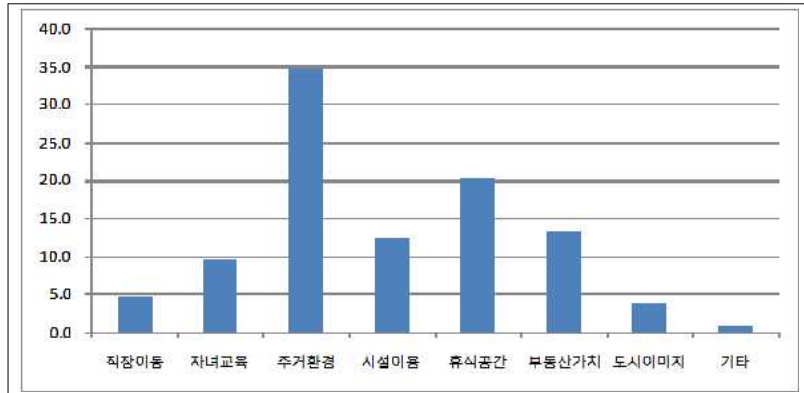
구 분	이주의향				카이 제곱	자유 도	유의 확률
	없다	잘모르겠다	있다	합계			
성별	남자	253(65.5)	80(20.7)	53(13.7)	3.146	2	.207
	여자	272(62.5)	112(25.7)	51(11.7)			
	합계	525(63.9)	192(23.4)	104(12.7)			
연령	20대	104(66.7)	43(27.6)	9(5.8)	17.450	8	.026
	30대	103(59.2)	46(26.4)	25(14.4)			
	40대	130(61.0)	52(24.4)	31(14.6)			
	50대	110(63.6)	35(20.2)	28(16.2)			
	60대이상	78(74.3)	16(15.2)	11(10.5)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거주지	대덕구	93(75.6)	18(14.6)	12(9.8)	30.560	8	.000
	동구	98(73.1)	25(18.7)	11(8.2)			
	서구	168(62.0)	66(24.4)	37(13.7)			

주택 소유	유성구	74(49.3)	45(30.0)	31(20.7)	150(100.0)	2.775	2	.250
	중구	92(64.3)	38(26.6)	13(9.1)	143(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학력	중학교	38(77.6)	7(14.3)	4(8.2)	49(100.0)	9.850	4	.043
	고등학교	207(65.7)	78(24.8)	30(9.5)	315(100.0)			
	대졸이상	280(61.3)	107(23.4)	70(15.3)	457(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월수입	200만원	103(70.1)	33(22.4)	11(7.5)	147(100.0)	5.215	4	.266
	400만원	261(62.4)	101(24.2)	56(13.4)	418(100.0)			
	400만원초과	161(62.9)	58(22.7)	37(14.5)	256(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자산	1억미만	190(68.3)	63(22.7)	25(9.0)	278(100.0)	9.082	4	.059
	2억미만	162(63.8)	62(24.4)	30(11.8)	254(100.0)			
	2억 이상	173(59.9)	67(23.2)	49(17.0)	289(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직업	일반회사원	126(71.6)	35(19.9)	15(8.5)	176(100.0)	9.751	12	.638
	전업주부	78(61.4)	30(23.6)	19(15.0)	127(100.0)			
	학생	29(60.4)	14(29.2)	5(10.4)	48(100.0)			
	전문직	38(57.6)	18(27.3)	10(15.2)	66(100.0)			
	공무원	31(64.6)	9(18.8)	8(16.7)	48(100.0)			
	자영업	118(61.1)	47(24.4)	28(14.5)	193(100.0)			
	기타	105(64.4)	39(23.9)	19(11.7)	163(100.0)			
	합계	525(100.0)	192(23.4)	104(12.7)	821(100.0)			

**□ 이주이유**

행정도시로 이주이유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이기에 이주한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3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양질의 녹지 및 여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20.2%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부동산적 가치상승이란 이유로 13.5%이다.

구 분	직장이동과 관련하여	자녀교육 환경을 위해	주거환경 양호한 곳	양질의 시설이용	양질의 휴식공간	부동산적 가치상승	행정도시 이미지로	기타 (고향)	합계
빈도	5	10	36	13	21	14	4	1	104
(%)	(4.8)	(9.6)	(34.6)	(12.5)	(20.2)	(13.5)	(3.8)	(1.0)	(100)



<행정도시로의 이주이유>

#### □ 이주시기

행정도시로 이주의향이 있는 대상자의 이주시기를 조사한 결과, 3년 이내는 27.0%, 4년~5년 이내는 36.5% 그리고 6년 이후는 36.5%로 나타났다.

즉 5년 이내 이전하겠다는 의향은 유효퍼센트(이주대상자 104명 기준)상 63.5%이며, 전체 조사대상자(821명)의 8.1%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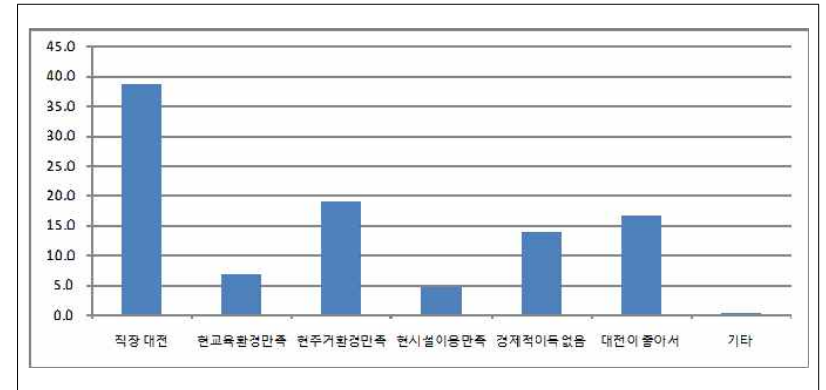
구 분	향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후	합 계
빈도	1	6	21	12	26	38	104
(%)	(1.0)	(5.8)	(20.2)	(11.5)	(25.0)	(36.5)	(100.0)

#### □ 이주하지 않는 이유

이주하지 않는 이유는 직장이 대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현 주거환경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냥 대전이 좋아서라는 응답도 전체의 16.7%로 높게 나타났다. 한

편 현 자녀교육환경에 대한 만족이라는 응답은 6.8%로 나타났다.

구 분	직장이 대전이라서	현 자녀교육 환경에 만족	현 주거환경에 만족	현 시설이용에 만족	경제적 이득이 없어	그냥 대전이 좋아서	기타	합계
빈도	272	48	133	32	98	117	2	702
(%)	(38.7)	(6.8)	(18.9)	(4.6)	(14.0)	(16.7)	(0.3)	(100.0)



<행정도시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 □ 직장이동의 가능성

귀하의 직장이 행정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결과, 총 625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가능성이 거의 없다와 없다는 응답이 67.8%로 나타났으며, 가능성이 있다와 매우 높다라는 응답은 9.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르겠더라는 응답도 22.9%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약 10% 정도가 행정도시로 직장이주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전혀그렇지 않을것이다	그렇지 않을것이다	잘 모르겠다	아마 그럴 것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합 계
빈도	212	212	143	56	2	625
(%)	(33.9)	(33.9)	(22.9)	(9.0)	(0.3)	(100.0)

□ 직장이동시 통근통학 의사

직장이 행정도시로 이전할 경우, 통근·통학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총 626명이 응답하였는데, 이중 전혀 그렇지 않음 것이다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38.7%로 나타났으며, 아마 그럴 것이다 또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응답 즉 통근·통학할 것이라는 응답이 36.1%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5.2%로 나타났다.

즉 행정도시로 직장이동 시 통근통학의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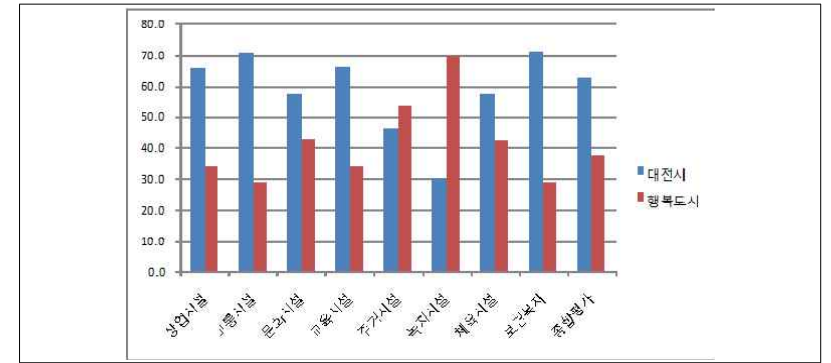
구 분	전혀그렇지 않을것이다	그렇지 않을것이다	잘 모르겠다	아마 그럴 것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합 계
빈도	104	138	158	193	33	626
(%)	(16.6)	(22.1)	(25.2)	(30.8)	(5.3)	(100.0)

4) 행정도시와 대전시 시설이용 의향

□ 시설 수준 및 이용지역 예측

대전시와 행정도시와의 시설수준을 예측하여 비교한 결과, 대전시의 주거시설과 녹지시설 수준이 행정도시에 비해 낮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편 어느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모든 부문에서 대전시의 시설을 이용한다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시설별로 보면 가장 이용율이 낮은 시설은 녹지시설(75.0%)로 나타났다. 체육시설(81.4%), 주거시설(82.8%) 등의 이용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문	시설수준		이용지역	
	대전시	행정도시	대전시	행정도시
상업시설	539(65.7)	282(34.3)	746(90.9)	75(9.1)
교통시설	583(71.0)	238(29.0)	-	-
문화시설	470(57.2)	351(42.8)	696(84.8)	125(15.2)
교육시설	543(66.1)	278(33.9)	729(88.8)	92(11.2)
주거시설	382(46.5)	439(53.5)	680(82.8)	141(17.2)
녹지시설	248(30.2)	573(69.8)	616(75.0)	205(25.0)
체육시설	472(57.5)	349(42.5)	668(81.4)	153(18.6)
보건복지시설	584(71.1)	237(28.9)	707(86.1)	114(13.9)
종합평가	512(62.4)	309(37.6)	719(87.6)	102(12.4)



<시설의 이용지역>



## 제2절 행정도시 '첫마을' 건설 및 분양 현황 검토

### 1. 첫마을 1단계 아파트

#### 1) 아파트 건설개요

세종시 첫마을은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송원리 일원 115만 5천㎡ 규모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두 7천여 가구(아파트 6,520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이며, 퍼스트프라임은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첫 아파트이다.

세종시 첫마을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건설·분양되는데, 첫마을 1단계에는 분양아파트 1,582세대와 임대아파트 660세대 등 총 2,24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아파트는 59㎡ 이상의 규모로 건설되고, 임대아파트는 102㎡이하의 규모로 건설된다. 유형별로 보면, 84㎡의 아파트 규모가 862세대(38.4%)로 가장 많이 분양되고, 다음은 119㎡ 규모가 414세대(18.5%) 분양된다.

<표 5-2> 세종시 첫마을 1단계 분양아파트 공급현황(단위 : 세대, %)

유형	종합		분양		임대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체	2,242	100.0	1,582	100.0	660	100.0
49㎡	286	12.8	-	-	286	43.3
59㎡	275	12.3	241	15.2	34	5.2
84㎡	862	38.4	699	44.2	163	24.7
102㎡	377	16.8	200	12.6	177	26.8
119㎡	414	18.5	414	26.2	-	-
140㎡	11	0.5	11	0.7	-	-
149㎡	17	0.8	17	1.1	-	-

출처 : 한국토지공사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홈페이지



[그림 5-1]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위치도 및 배치도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홈페이지

#### 2) 아파트 분양 및 계약현황<sup>9)</sup>

행정도시 첫마을은 2010년 11월 시작한 이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sup>10)</sup>에서 105%의 청약률을 보였으며, 이어 접수한 일반공급에서는 240%라는 청약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가장 인기가 없다'는 잔여세대 분양과정에서 무려 1만여 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인 퍼스트프라임은 97%라는 '높은 계약'을 남기며 분양되었다.

행정도시 첫 번째 주거단지인 첫마을 1단계 아파트에 대한 지역별 계약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도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 계약자의 약 32%인 501명이 대전지역 거주자이며, 충남지역 거주자도 327명으로 약 21%를 점하고 있다.

충청권 외부지역으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약 22%인 341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거주자는 약 18%인 279명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계약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충남지역 거주자는 약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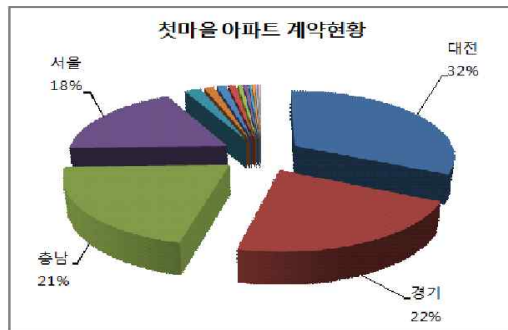
9) 2011년 3월 16일자 중도일보와 헤럴드 생생뉴스 자료를 정리하였음

10) 1차 분양 1,582가구 가운데 세종시로 옮겨가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분은 50%인 791가구이다.

**<표 5-3> 첫마을 1단계 아파트 지역별 계약현황**

지역	계약자수(인)	비율(%)	지역	계약자수(인)	비율(%)
대전	501	31.99	전남	8	0.51
경기	341	21.78	경남	5	0.32
충남	327	20.88	경북	5	0.32
서울	279	17.82	광주	3	0.19
충북	31	1.98	강원	3	0.19
전북	19	1.21	울산	2	0.13
인천	18	1.15	제주	1	0.06
부산	14	0.89	전체	1,566	100.0
대구	9	0.57	-	-	-

자료 : 대전시청



**[그림 5-2]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지역별 계약자 현황**

## 2. 첫마을 2단계 아파트

### 1) 아파트 건설개요

행정도시 첫마을 2단계는 2, 3, 4블록 등 3개 블록에서 총 3,956세대가 공급되고, 이중 분양세대는 3,576세대이다. 블록별로는 B-2블록이 1,240세대, B-3블록이 1,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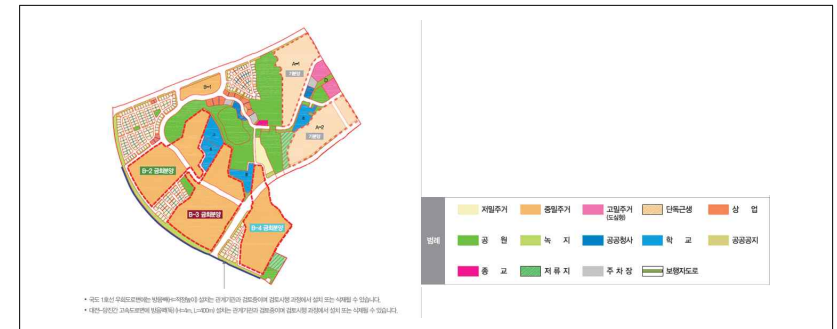
세대 그리고 B-4블록은 1,328세대가 공급된다.

첫마을 2단계의 대지면적은 총 323,365㎡이며, 건폐율은 약 13%와 17% 그리고 용적율은 2, 3블록의 경우 약 130%, 4블록의 경우 약 180%이다.

**<표 5-4> 세종시 첫마을 2단계 분양아파트 공급현황**

블록	B-2	B-3	B-4
건설호수	1,240호 (분양 1,084, 공입 156)	1,388호 (분양 1,164, 공입 224)	1,328호 (분양 1,328)
대지면적	107,428㎡	125,410㎡	90,527㎡
건폐율	17.08%	13.17%	17.13%
용적률	139.09%	130.52%	186.88%
건축면적	18,374.64㎡	16,510.24㎡	15,503.27㎡

자료 : <http://first2.lh.or.kr/>



**[그림 5-3] 세종시 첫마을 2단계 토지이용계획**

### 2)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 및 계약현황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 5월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3,576가구를 분

11) 충청투데이 2011년 6월 23일 기사

양하였으며, 임대주택 1,362가구(1단계 660가구, 2단계 702가구)는 2011년 9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2단계 총 공급가구수는 4,938세대이다.

행정도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에 대한 분양결과, 3,576세대 분양에 총 1만 7,783명이 접수해 497%의 청약률을 보였다. 당첨자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지역 거주자가 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가 23.2%, 서울시가 21.1%, 대전시가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역으로는 부산시가 2.4%(86명), 인천시와 충청북도가 각각 1.5%(54명), 전라북도(30명), 경상북도(19명), 경상남도(13명), 대구시(11명) 및 제주도(1명)에서도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당첨자의 약 49%는 대전·충남거주자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도 약 45%로 나타나 2지역에서 대부분의 전입(인구이동)이 예상된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첫마을 1단계와 비교하면, 대전·충청권은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오히려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첫마을 2단계 아파트는 전체 3,576세대 중 3,128세대가 계약을 완료하여 87%의 청약률을 나타냈다. 주택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가 총 1,920세대 공급에 1,828세대(95.2%)가 계약을 마쳤고, 85㎡초과는 1,656세대 대상에 1,300세대(78.5%)가 계약을 완료했다. 이와 같은 높은 청약률은 실수요자들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제3절 소결

본 5장에서는 행정도시가 건설될 경우, 대전시민의 행정도시로의 이주, 즉 인구이동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 진행된 행정도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 및 계약결과를 살펴본다.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도시로의 이주의향 조사결과, 설문대상자의 12.7%가 행정도시로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주의향자들의 이주시기를 조사한 결과, 5년 이내가 63.5%이고, 5년 이후가 36.5%로 나타났다. 즉 이주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의 많은 수가 5년 이내에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그룹)들의 개인적 성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나 거주지, 학력, 자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조사대상자 중 40-50대, 서구와 유성구, 대줄이상, 대자산가들의 이주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도시 첫마을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분양 및 계약현황을 살펴본 결과, 충청권 거주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서울, 경기도) 거주자도 약 40% 정도로 나타나 이들 2지역에서의 세종시로 인구유입이 예상된다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최근 진행된 행정도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결과를 기초해 볼 때, 향후 대전시민의 행정도시로 이전은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대전시로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인구유출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될 뿐이다.

---

## 제 6 장

---

### 행정도시 건설과 대전시의 대응방안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대전시 대응방안 및 과제

---

간지뒀면

## 제6장 행정도시 건설과 대전시의 대응방안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본 연구는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주거환경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장은 본 연구의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행정도시 첫마을 아파트가 분양되는 등 행정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2장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행정도시 건설의 추진현황과 관련계획을 검토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의 배경을 몇 자로 정리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행정도시는 '행정수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수도 건설이 위헌판결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행정도시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2007)에 기초하여 진행되는데, 이들 계획에 따르면 행정도시는 향후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족적이며 매력적인 신도시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3장에서는 행정도시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2004), 대전 광역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상생방안(2008),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도시와의 상생발전 전략수립(2008) 등이 있으며, 최근 연구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구(2010년)가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발전전략(2005), 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방안(2010) 등의 연구도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

는 세종시와 인접지역간 공동발전의 키워드는 '연계와 협력(Networking)을 통한 지역특성 강화와 기능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상생발전 전략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장에서는 행정도시가 건설될 경우, 대전시에서 행정도시로 인구이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사례로서, 수도권의 분당과 일산신도시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창원시와 남양신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전국 시·도에서 신도시로의 전입현황(인구이동)을 분석하였고, 또한 전국 시·도에서 모도시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대도시로(분당의 성남시, 일산의 고양시, 창원의 마산시, 남악의 목포시)의 전입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신도시가 건설된 5년 이후 신도시로의 전입자 상당수가 신도시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 대도시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당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에서의 전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신도시의 사례에서도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행정도시가 건설될 경우, 충청권과 대전시에서 행정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5장에서는 행정도시 건설과 대전시민의 인구이동 예측이란 제목아래, 대전시민의 행정도시로 이주의사(설문조사) 및 행정도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계약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도시로의 이주의향 조사결과, 설문대상자의 12.7%가 행정도시로 이전할 의사가 있으며, 이주시기는 5년 이내가 63.5% 그리고 5년 이후가 36.5%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 중 40-50대, 지역적으로는 서구와 유성구, 대졸이상,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전시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도시 첫마을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분양 및 계약현황을 살펴본 결과, 충청권 거주자가 전체의 50%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가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4장에서 예견되었던 인구이동의 성향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향후 행정도시 구성원의 많은 부분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대전시의 대응방안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연구방법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기수립된 계획에 대한 검토이며, 또한 기건설된 신도시에 대한 사례분석이며 마지막은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분석이다.

이러한 3가지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된 결과 및 결과별 대전시의 대응방안(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법과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도시는 2030년까지 1, 2, 3단계로 구분 건설될 예정이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건설 단계별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국토학회에서 2011년 실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영향연구 등의 연구가 보다 심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국가는 세종시와 인접지역의 상생발전을 추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최대한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도시 건설계획에 따르면, 목표인구가 50만이고, 이중 자족적 유발인구가 30여만명이 되는데, 이 유발인구의 상당부분이 충청권에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전시에서의 인구유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대규모 신도시 건설 이후 신도시로의 인구이동, 즉 전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도시 건설 5년 이후 신도시로 전입자의 상당부분이 인접지역에서 유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도시 건설이후 대전시에서 행정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행정도시 첫마을 아파트에 대한 분양 및 계약결과, 전체 대상자의 20-30%가 대전시민이라는 점 등은 향후 대전시에서 행정도시로의 인구유출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전시민 설문조사 결과, 행정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결국 대전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 건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도시 건설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주거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도시 건설 이후 행정도시로의 이전의향이 설문대상자의

12.7%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이전의향자가 고학력자 또는 고소득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 주거환경의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행정도시로 직장이 이전할 경우, 통근통학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전시에서 행정도시로의 통근통학의 편리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구분	여건 및 연구결과	대응방안 및 과제	비 고
계획 검토	<input type="checkbox"/> 1, 2, 3단계로 진행(2030년 완공)	◆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	
	<input type="checkbox"/> 국가는 세종시와 인접지역 상생발전을 이루는 시책 지원방안 마련(법)	◆ 국가의 역할 강조	※ 설문조사에서도 도출됨
	<input type="checkbox"/> 계획·목표인구 50만, 이중 자족적 유발인구는 32-35만명	◆ 충청권에서의 인구 유출 예상	
사례 검토	<input type="checkbox"/> 신도시 개발 시 인접지역에서 신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 진행	◆ 유출인구규모 추정 및 대응방안 모색	※ 주거형신도시와 자족형 신도시의 차이점 고려
	<input type="checkbox"/> 대전시민의 행정도시로의 아파트 청약·계약 진행 (20-30%)		※ 실수요 또는 투자적 요인인지 검토 필요
설문 조사	<input type="checkbox"/> 행정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의지 필요	◆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 행정적, 정치적 접근 필요
	<input type="checkbox"/> 행정도시의 긍정, 부정적 영향이 '주거부문'으로 예측		
	<input type="checkbox"/> 행정도시로 인구이동 발생 가능성 높음(12.7%) : 고학력, 고소득자의 유출 예상	◆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휴식공간 제공 ◆ 통근·통학의 편리성 제공	※ 전국(충청권)에서의 인구유입 대책 마련 ※ 수도권 이주자의 대전시 거주 촉진

## 참 고 문 헌

- 강현수, 2010,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발전방안, 세종시와 충남의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충남발전연구원
- 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자료)
- 건설교통부,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 대전광역시, 2004,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 대전발전연구원, 2008, 대전광역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상생방안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도시와의 상생발전전략 수립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영향
- 이우배, 2003, 창원 신도시 사례로 본 남악신도시개발의 현안과제, 한국도시행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 전라남도, 2006, 도청이전백서(중)
- 조명래, 2010, 세종시와 대전시의 미래, 대전발전포럼, 2010년 가을호, 통권34호
- 충남발전연구원, 2010, 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방안
- 충북개발연구원,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발전전략
- 통계청 자료 : 주민등록 전입, 전출인구 자료
- 한국토지공사, 1997, 분당신도시 개발사
- 한국토지공사, 1997, 일산신도시 개발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첫마을 퍼스트프라이م 홈페이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 대전일보 2011년 3월 21일 기사
- 중도일보 2011년 3월 16일 인터넷기사
- 충청투데이, 2011년 6월 23일 기사
- 헤럴드 생생뉴스, 2011년 3월 16일 인터넷기사

원고뒷면

---

## 부 록

---

- 부록 1. 대전시민 조사 설문지
  - 부록 2. 세종시 이전 공무원 설문조사 현황
- 

간지뒀면



## 부록 1. 대전시민 조사 설문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기입되는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통계적으로만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임 병 호 (☎ 042-530-3511 / 042-530-3553)

#### ◆ 행정복합도시 개요

- 건설기간 : 2030년 완료
- 목표인구 : 50만명
- 면 적 : 총 465km<sup>2</sup>
- 이전기관 : 16개 중앙행정기관(9부 2처 등)
- 대전시로부터 거리 : 약 20km



####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도와 성공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1-1) 귀하는 **행복도시 건설에 대해 관심(목적, 진행정도 등)**이 어떻습니까?

- ① 관심이 거의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관심이 있다    ⑤ 관심이 매우 높다

문1-2) 귀하는 행복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 ① 전혀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다    ②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성공적일 것이다    ⑤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

문1-3) 만약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모두 응답해 주세요**

- ① 정부의 관심부족    ② 경제적 이유(건설비용)    ③ 계획의 부실    ④ 해당지자체의 의지부족  
⑤ 주민의 의지부족    ⑥ 기타 ( )

문1-4) 행복도시가 향후 **보다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 ① 정부의 추진지    ② 경제적 지원(건설비용)    ③ 계획의 보완    ④ 해당지자체의 의지  
⑤ 주민의 의지    ⑥ 기타 ( )

#### 행복도시의 매력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2-1) 귀하의 **행복도시에 대한 매력도(호감)**는 어떻습니까?

- ① 호감이 거의 없다    ② 호감이 없다    ③ 호감이 있다    ④ 호감이 매우 높다

문2-2) 귀하의 **대전시에 대한 매력도(호감)**는 어떻습니까?

- ① 호감이 거의 없다    ② 호감이 없다    ③ 호감이 있다    ④ 호감이 매우 높다

문2-3) 귀하의 행복도시와 대전시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호감)**는 어떻습니까? **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행복도시	←	←				→	→	대전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매우높다				동일하다			높다	매우높다

#### 행복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3-1) 행복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② 영향이 약할 것이다    ③ 그저 그럴 것이다  
④ 영향이 클 것이다    ⑤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문3-2) 행복도시 건설이 **대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잘모르겠다	긍정적 영향	매우 긍정적 영향
① 주거부문					
② 산업부문					
③ 상업·업무부문					
④ 국제교류부문					
⑤ 교육부문					
⑥ 문화예술·가체육부문					
⑦ 보건복지부문					
⑧ 종합적인 부문					

문3-3) 위의 부문 중 대전시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칠 부문은 어떤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거부문    ② 산업부문    ③ 상업·업무부문    ④ 국제교류부문    ⑤ 교육부문

- ⑥ 문화예술여가체육부문                      ⑦ 보건복지부문

문3-4) 위의 부문 중 대전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문은 어떤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거부문            ② 산업부문            ③ 상업·업무부문            ④ 국제교류부문            ⑤ 교육부문
- ⑥ 문화예술여가체육부문            ⑦ 보건복지부문

문3-5) 행복도시 건설이 완료될 경우, 행정복합도시와 대전시 중 **어떤 도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 ① 행복도시            ② 대전시            ③ 잘 모르겠다.

**주거만족도 및 이주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4-1)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지의 주변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00점 만점에 몇 점?
① 백화점 등 상업시설 이용/수준						
② 지하철, 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수준						
③ 공연시설, 극장 등 문화시설 이용/수준						
④ 학교 및 학원 등 교육환경 이용/수준						
⑤ 아파트, 단독 등 주거공간 이용/수준						
⑥ 공원 등 녹지공간 이용/수준						
⑦ 체육관, 경기장 등 체육시설 이용/수준						
⑧ 병원, 의원 등 보건복지시설 이용/수준						
⑨ 전체적인 거주환경(종합적 만족도)						

문4-2) **귀하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하위층		중하위층		중위층		중상위층		상위층

문4-3) 귀하는 행복도시가 건설될 경우 **이주할 실 의향**은 어떻습니까?

- ① 의향이 거의 없다    ② 없는 편이다    ③ 아직 잘 모르겠다    ④ 이주 의향이 있다    ⑤ 매우 높다
- ☞ **없다**와 **아직 잘모르겠다**는 [문 4-6]으로, **있다**는 [문 4-4]로 이동

문4-4) 이주할 실 계획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이동과 관련하여                      ② 보다 좋은 자녀교육환경을 위해서
- ③ 주택 등 주거환경이 좋은 곳이므로                      ④ 양질의 상업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 ⑤ 양질의 녹지 및 여가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⑥ 부동산적 가치(경제적 이득)가 있을 것 같아서
- ⑦ 그냥 행복도시 이미지가 좋아서                      ⑧ 기타(                      )

문4-5) 이주할 실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향후 1년 이내    ② 2년 이내    ③ 3년 이내    ④ 4년 이내    ⑤ 5년 이내    ⑥ 6년 이후

문4-6) **만약 이주계획이 없으시다면(잘 모르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 직장이 대전이어서                      ② 현 자녀교육환경에 만족하기 때문에
- ③ 현 주택 등 주거환경에 만족하기 때문에    ④ 현 상업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이용에 만족하기 때문에
- ⑤ 현 녹지 및 여가공간 이용에 만족하기 때문에    ⑥ 이주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없어서
- ⑦ 그냥 대전이 좋아서                      ⑧ 기타(                      )

문4-7) 귀하의 **직장이 행복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① 가능성이 거의 없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가능성이 있다    ⑤ 매우 높다

문4-8) 귀하의 **직장이 행복도시로 이전할 경우, 통근·통학할 의사**가 있습니까?(두 도시간 거리는 약 20km)

- ①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②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아마 그럴 것이다    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복도시와 대전시 시설이용 의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5-1) 행복도시 2020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이 완료될 경우, 다음 각 시설은 **어느 도시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시며, **어느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시겠습니까?(2곳 모두 응답)

시설구분	어느 도시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지역의 시설을 주로 이용하시겠습니까?	
	대전시	행복도시	대전시	행복도시
① 백화점 등 고차 상급시설				
② 지하철, 버스 등 교통시설				
③ 공연시설, 극장 등 문화시설				
④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				
⑤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⑥ 공원 등 녹지시설				
⑦ 체육관, 경기장 등 체육시설				
⑧ 병원, 의원 등 보건복지시설				
⑨ 전체적인 도시시설(종합적 평가)				

※ 설문 응답자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 만 _____세
3	귀하께서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함께 사는 가족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혼자 _____ ② 배우자 _____ ③ 미혼자녀 _____ ④ 기혼자녀 _____ ⑤ 부모 _____ ⑥ 손자녀 _____ ⑦ 기타(친척, 친구 등) _____
4	귀하의 거주지는? _____ (구) _____ (동)
5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누구 소유입니까? ① 자가(본인 및 배우자 소유) ② 자가(자녀소유) ③ 전세 및 기타
6	귀하의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이상
7	주택의 유형은? ① 아파트 ② 단독 ③ 다가구 ④ 다세대 ⑤ 연립주택 ⑥ 기타거처
8	대전시 거주년수? ( )년 또는 ( )년부터 거주
9	귀하의 월수입은? (모든 형태의 수입을 포함하며, 배우자 월수입 포함)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10	귀하의 자산 규모는? (부동산, 금융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며, 배우자 자산 포함)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3000만원 미만 ③ 3000만원~5000만원 미만 ④ 5000만원~1억원 미만 ⑤ 1억원~2억원 미만 ⑥ 2억원~5억원 미만 ⑦ 5억원 이상
11	귀하의 직업은? ① 일반회사원 ② 전업주부 ③ 학생 ④ 전문직 ⑤ 공무원(군인) ⑥ 개인사업 ⑦ 무직 ⑧ 기타

부록 2. 세종시 이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현황

◇ 서울신문 주관 설문

- 기 간 : 2010. 7. 22 ~ 7. 26
- 대 상 : 273명(이전에정인 9부 2처 2청 등 16개기관)
- 방 법 : 기관별 국장급 2명, 과장급 3명, 사무관 4명, 6급이하 8명 설문
- 결 과

<이주방식>

- ▶ 혼자 가겠다 52.7%
- ▶ 가족과 함께 간다 34.8%
- ▶ 서울에서 출퇴근하겠다 5.1%
- ▶ 모르겠다 7.4%

<기혼자가 혼자가는 이유>

- ▶ 자녀교육 때문 54.2%
- ▶ 가족들의 반대 때문 21.2%
- ▶ 본인스스로 결정 17.8%
- ▶ 세종시 시설 미비 6.8%

<세종시 이전에 맞춰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

- ▶ 업무상 비효율에 대한 대책 48.0%
- ▶ 쇼핑공간,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 20.5%
- ▶ 교육시설 마련 17.2%

<세종시로 이주할 수 없다면 그 대안이 있는지>

- ▶ 생각해 본 적이 없다 52.0%
- ▶ 세종시로 가지 않는 다른 부처로 전출 22.7%
- ▶ 민간회사로 이직 3.7%
- ▶ 무응답 21.6%

◇ 행정안전부(연금복지과) 주관 설문

- 기 간 : 2010. 9월
- 대 상 : 세종시 이전공무원 11,993명 중 응답자 5,017명
- 방 법 : 온라인 상에서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설문
- 결 과

<이주 의향>

- ▶ 가족과 함께 간다 52.6%
- ▶ 혼자 간다 35.4%
- ▶ 비 이전 12.3% / 사유 : 자녀교육 42.9%, 배우자직장 40.3%, 생활편의시설 5.8% 순

<이주 희망지역>

- ▶ 세종시 82.9%
- ▶ 대전 13.5%
- ▶ 세종시 외곽 4.2%

<이주 희망 주택>

- ▶ 분양 아파트 61.5% / 24~34평 51.6%, 34~44평 32.1%, 24평이하 11.3%, 44평이상 5.1% 순  
※ 분양시 고려사항 : 자녀교육 등 주변환경 50.7%, 분양가격 31.3%, 통근거리 14.5% 순
- ▶ 임대 아파트 16.9% / 24~34평 41.7%, 24평이하 33.1%, 원룸식 18.4%, 34~44평 6.7% 순  
※ 전세 82%, 월세 18% / 전세보증금 평균 8,200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4,100만원+월25만원 정도  
※ 임대시 고려사항 : 통근거리 31.6%, 주변환경 30.6%, 전세금 수준 23.0, 자녀교육 14.8% 순
- ▶ 독신숙소 11.7%
- ▶ 단독주택 9.9%

정책연구보고서 2011-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전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1년 8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28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 1길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쪽번호 김추기